

2018

봄

---

# 생협 평론

30

---

<b>길잡이</b>	각자도생의 위험사회를 넘어 함께하는 안전사회를 향해 — 박종현(편집위원장)	6
------------	--	---

**특집**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b>문재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b> —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
<b>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b> — 편용우(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30
<b>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b> — 임남희(안산산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힐링센터0416쉽과힘 사무국장)	45
<b>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b> — 박선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62
<b>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b> — 김현대(한겨레 기자)	82
<b>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b> —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96



<b>이슈</b>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허세 부리기 좋은 집 — 김미정(두꺼비하우징 대표)	108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 우리가 함께 걷는 길 — 이형우(루트임팩트 매니저)	123
<b>생협 zoom in</b>	봄이여 오라 — 김성광(한겨레 기자)	138



<b>기획 연재</b>	<b>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1</b>	
	사회적경제로 가난한 사람을 엮다	140
	: 송경용 신부	
	—차형석(사시IN 기자)	
<b>서평</b>	내일도 밥을 줄게, 나는 소치기니까	152
	: 모리 에토 글, 요시다 히사노리 그림, 『희망의 목장』	
	—임정은(빵과그림책협동조합)	
	아니, 세상에 이런 과학자가 있다고요?	157
	: 이정모,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강양구(지식 큐레이터)	
<b>협동조합 소식</b>	협동조합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는 자연재해	162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b>생활 속 사회적경제</b>	새로운 시작을 함께 준비할 사회적경제!	166
	—신효진(편집위원회)	
	독자의 소리	4
	정기구독 안내	192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69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186

## 생협 평론

개간 2018년 봄 제30호 **퍼낸날** 2018년 3월 20일 **퍼낸이** 윤유진 **편집위원** 김현대 박경숙 박범용 임정은 조금득 조현경  
**편집위원장** 박충현 **퍼낸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주소** 0731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 **편집간사** 신효진 **디자인편집** 잇다 **인쇄** 아람P&B  
**ISSN** 2093-9876 **등록번호** 구로, 바00038 **등록일** 2016년 4월 5일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도서 반품 및 유통 관련 문의** 도서출판 **알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 | 전화 · 02-324-3800

##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협평론』을 기대하며

### 독자의 소리

유한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스물셋이 되던 2013년, 홍성의 풀무공동체를 통해 협동조합을 만난 후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다. 그 관심을 이고, 협동조합을 보다 이론적으로 학습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했다. 20대의 절반 이상을 협동조합을 배우는 데 투자하고, 경험하고자 한 것은 협동조합을 통해 내가 꿈꾸는 사회의 한 모습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창간호부터 챙겨 읽지는 못했지만, 『생협평론』을 통해 공부를 하고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먹거리의 문제부터 주거와 의료, 노동과 경제, 정치의 문제까지 『생협평론』이 단지 이론만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주요하게 다루었듯이 앞으로도 관련된 소식들을 『생협평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모든 사람이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협동조합운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가부장 문화 속에 긴 세월 차별받고 숨겨져 있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 알리는 일, 장애를 가진 사람과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담는 일, 환경 문제와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생협평론』이 되길 바란다.

지난 29호에서도 다루었지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서 일하면서 만났던 생협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생협이 자발적으로(무급으로) 참여하는 활동가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생협이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직면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지속적으로 생

협을 찾고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30대가 기존 방식의 생협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이슈들이 바로 현재 20~30대의 관심사이며,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을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구조를 통해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생협들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을 『생협평론』에서도 더욱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한다.

생각은 글이 되고 글은 언어가 되며, 언어는 한 운동의, 한 집단의 문화가 된다. 그렇게 형성된 한 집단의 문화는 그 집단의 내부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이어주고 드러낸다. 『생협평론』에서 확인된 글과 삶들이 이 사회에 더욱 많이 공유되기를 꿈꾼다.

---

길잡이

---

박종현

편집위원장

# 각자도생의 위험사회를 넘어 함께하는 안전사회를 향해

언제부턴가 재난이 우리 사회를 습격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양상도 다양해졌다. 우리의 불안도 한층 커지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들로, 태풍·홍수·지진·가뭄 등 재해로 인한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산재·환경오염·국가기반 체제 마비·전염병 등 피해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각자는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어떠한 재난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며,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이번 호의 특집에서는 ‘재난과 안전’을 주제로 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안전 및 사회통합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싱크탱크는 한국행정연구원이다. 이곳의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이 특집의 총론을 맡아주었다.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 설정된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패러다임과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현재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적 추진 필요 과제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예방적 관점의 위험관리체계와 재난관리 주관기관들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정책에 회복력의 개념도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에 특히 눈길이 간다. 한편, 재난관

리 선진국인 이웃 나라 일본이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소개는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와 편용우 교수가 맡아주었다. 일본에서는 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4조로 구분한다. 재해에 스스로 대비하는 가정 내에서의 자조<sup>自助</sup>, 개개인들이 서로 돕는 호조<sup>互助</sup>, 지역 내의 커뮤니티가 돕는 공조<sup>共助</sup>,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돕는 공조<sup>公助</sup>가 그것이다. 재해 패러다임이 재해를 막는 방재<sup>防災</sup>에서 재해를 감소시키는 감재<sup>減災</sup>로 바뀌는 가운데, 감재의 방법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조<sup>自助</sup> 및 공조<sup>公助</sup>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을 당장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자들과 지역 공동체의 심리적·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임남희 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부설 힐링센터0416쉼과함 사무국장의 글은 세월호 사태를 겪은 안산시 고잔동의 경험을 토대로 재난 공동체의 회복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공동체의 복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재난 발생 이후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마을을 다시 어떻게 되살려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들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활동가들이 함께한 포럼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박선하 연구원은 대지진을 겪은 고베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지진재난을 겪은 경주의 활동가들이 펼쳐 놓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지역사회를 뿌리째 흔들 어놓은 큰 재난을 겪고 '재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

려준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도시에서 재난을 대하는 협동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재난을 목격하고 그 치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재난과 관련해 시민사회에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느슨하면서도 촘촘한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협동의 잠재력을 지닌 지역의 생협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말씀에도 주목해보았으면 좋겠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는 국내외적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재난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sup>ICA</sup> 총회에서 ‘난민 사태와 이민자 유입에 대처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주제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김현대 한겨레 기자가 소개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조현경 시민경제센터장은 산업사회가 초래한 위험이 사회적·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인들에게 떠넘겨짐에 따라 우리 모두의 불안감 또한 한층 커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안전 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자세히 소개해 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남겨진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희망의 목장』을 소개한 〈서평〉과 일본과 미국에서 재해 복구를 미션으로 삼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활동을 들려주는 〈협동조합 소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

〈이슈〉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공간을 만들어 거주 및 일의 새로운 공동체를 가꾸려는 활동들을 다뤄보았다. 두꺼비하우징의 김미정 대표는 2010년 저층주거지를 아파트처럼 관리해보자는 제안에서 시작한 공유주택의 실험을 디테일이 살아 있는 글로 들려준다. 모래놀이를 하며 부른 노래처럼 헌집 고쳐 새집을 주려는 기획이 무엇을 꿈꾸었는지, 기존의 도시재생과 이들이 꿈꾸고 실현해온 공가(公家)를 통한 도시재생이 어떻게 다른지, 그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적경제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이형우 루트임팩트 매니저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의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가꾸려는 헤이그라운드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체인지메이커들에게 더 나은 일의 환경을 제공하는 그들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는 지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꼼꼼한 취재와 정교한 분석으로 협동조합 현장 조사의 모범을 보였던 “협동조합을 가다”와 한 컷의 그림으로 촌철살인의 풍자를 펼쳤던 “생협 만평”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동안 지면을 빛내준 시사IN의 김은남 기자와 박해성 만화가에게 감사 인사 드린다. 이번 호부터는 시사IN의 차형석 기자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만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을 신설했다. 첫회는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제도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송경용 신부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한겨레의 김성광 사진기자가 우리 사회나 사회적경제 현장을 한 컷의 사진으

로 포착해주기로 했다. 이 새로운 코너들이 앞으로 생각거리와 영감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 과학의 다양한 세계를 다룬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을 다룬 <서평>과 집 정리 및 청소를 돕는 협동조합들을 소개한 <생활 속 사회적경제>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  
집

##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재난은 우리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홍수·지진·가뭄 등 재해로 인한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산재·환경오염·국가기반 체제 마비·전염병 등 피해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 사태 때에는 한층 성숙된 재난 관리가 행해졌지만,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사태는 안전사회를 위해 우리가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지구 온난화,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들이 증가하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의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재난 이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사회의 안전의식과 근본적인 재난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시민사회·지자체·중앙정부 각각이 자기 몫을 다하는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의 체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해외에서는 재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경제 영역은 안전사회로의 안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다뤄보기로 한다.

# 생협 평론

문재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

\_\_\_\_\_ 최호진

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

\_\_\_\_\_ 편용우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

\_\_\_\_\_ 임남희

투자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_\_\_\_\_ 박선하

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

\_\_\_\_\_ 김현대

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

\_\_\_\_\_ 조현경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문재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

“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이슈 및 국정 아젠다로 전문가들은

- ①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선진화, 노후 및 화재취약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 ② 신종위험의 증가 및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
- ③ 방사능·핵 등과 관련한 특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선정하고 있다. ”

## 1. 우리 사회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경제 수준과 비교해 판단해보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1인당 GDP 2만 8,000달러, 세계 경제순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사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까지 안전 수준은 낮은 형편이다. 예를 들어, 자살을 포함한 사고성 사망(외인사망)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3위(10만 명당 70.2명) 수준에 있어 아직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OECD의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sup>BLLI</sup>,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은 OECD 35개국 중 21위(안전지수는 67.7점)에 불과하여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사망 10위(2015), 자살 2위(2015),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3위(2010), 산재사망 1위(2012), 살인 및 강간범죄율 6위(2015) 등 안전사고 사망과 관련된 대부분의 OECD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잠재적 안전사고 발생 분야인 대기오염도 역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최고 나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sup>1</sup>

한편,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줄고 있었던 대형 사회적 재난이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요양병원 화재, 메르스, 경주 지진, 여성 대상 폭력범죄 증가 등 최근 짧은 기간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sup>2</sup> 특히, 세월호 참사,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의 경우 사고 발생 대처에 대한 미흡한 지식으로 인해 사고의 피해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어 국민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다.<sup>3</sup>

1 정치범(2014)과 행정안전부(2017)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

2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안전하다'는 응답은 28.5%에서 23.9%로 줄고, '불안하다'는 응답은 29.5%에서 39%로 늘었다.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2014년 11월 출범 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주도하는 노력을 추진해왔다.<sup>4</sup> 이와 더불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를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중요한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새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 및 우선적 추진 필요 과제를 제시한 후, 우리 사회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2.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추진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 공약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 3 이러한 사례들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 대응, 복구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점차 인식해가고 있는 상황이다(행정안전부, 2017).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련 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의식의 제고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안전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최호진·오윤경, 2015).
- 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안전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안전 전 분야,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중장기적 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최호진 외, 2017: 2-3).

를 위해 4대 목표와 5대 이행 방법을 발표했다. 4대 목표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대 이행 방법에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5</sup>

(그림1) 대선 후보 문재인, 10대 공약 중 일부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	문재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10	제목: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공약분야	환경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1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2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원인배출원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비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상감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전환 ·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3 강원권리본부 전문·상·특·정·성 보장**

- 권역별 지방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특충

**4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기습기 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출처: 더불어민주당(2017: 19-20)에서 재인용

또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20대 국정전략 중 재난관리체계를

5 더불어민주당(2017: 19-20)과 최호진 외(2017: 3-4)의 내용을 재인용.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 계획에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대 국정목표)’의 전략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20대 국정전략)’에 포함되어 있다.<sup>6</sup>

〈그림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내용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풀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안전처) 56 통합적 재난관리체제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안전처)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제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송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20)에서 재인용

6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20)와 최호진 외(2017: 4-5)의 내용을 재인용.

문재인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재난관리체계의 관련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우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므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임무이자 존재 의의이지만, 세월호 참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과거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한다고 발표했다.<sup>8</sup>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의 세부 국정과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 체계 구축(55번 과제)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56번 과제)를 포함시켰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변화는 청와대(BH)-행정안전부 중심의 체계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56번 과제에서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 대응 역량 모두가 강화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청와대 내 국가위기 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방과 해경을 분리·독립시키고,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휘명령체계를 재편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sup>9</sup>

7 이하의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88)의 내용 중 일부를 재인용했음.

8 효과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 맞추어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 대응 역량 모두가 강화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업을 방해하는 주변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해양 주권과 해양 영토를 수호하겠다고 내용을 발표했다.

9 정부는 소방과 해경의 분리·독립을 통해 전문성 및 의사결정 효과성을 강화하는 한편, 청와대와 행안부 중심으로 지휘명령체계를 재편하여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진 최근 재난의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3.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이슈와 국정과제 :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sup>10</sup>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정책 이슈와 국정과제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재난안전 및 사회통합 분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통합연구부 소속 박사급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주요 이슈 및 과제를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이슈 및 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회·문화적 기반과제, 정책 기반과제, 정책목표과제 등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재난안전 분야의 국정과제를 도출했다.<sup>11</sup> 특히,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을 의미하는 정책목표과제와 관련하여 25개 국정과제(안)를 도출했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25개 국정과제(안)를 크게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 강화, ② 지진 등 취약 분야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③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전 예측 기능 강화, ④ 자연·기술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 둘째,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① 항공, 해양, 철도 등 교통안전 선진화, ② 범

10 이하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2017: 9-18)과 채중현(2017: 28-49)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했음.

11 사회·문화적 기반과제는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자본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과 관련된 과제를 의미함. 또한, 정책기반과제는 정책목표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 혹은 기본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과제들로서, 재난안전관리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정책목표과제는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구체적인 과제들임.

〈표1〉 재난안전 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이슈 및 국정과제

대분류	중분류	국정과제		
사회·문화 기반과제	사회 신뢰 / 정부 신뢰 제고	국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국민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국민 안전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및 민간 참여 확대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지역 안전관리		
		재난 현장 참여 유관기관 관리체계 정비 및 강화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리 참여 확대		
		시민사회 안전 모니터링 역할(공익 신고 등) 활성화		
정책기반과제 (재난안전관리 과제)	사전적·예방적 역량 확대	범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지역 기반 재난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예방사업 예산 및 투자의 확대		
		첨단 기술 활용 예방사업 선진화		
		안전 규제 효과성 제고		
		위험 업종 종사자 안전 확보 강화		
	문제 해결 역량 강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재설계 및 효과성 제고		
		대형 복합재난 통합 대응역량 강화		
		현장 중심 재난대응 의사결정체계 확립		
		소방, 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과학적 사고원인조사 시스템 도입 및 법제도 실효성 확보		
		사고원인자 처벌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책임성 확보		
		장기 복구(재난 후 갈등관리 등) 체계 구축		
		정책목표과제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 강화
				지진 등 취약 분야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전 예측 기능 강화
자연·기술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융합적 관리체계 구축				
사회안전	항공, 해양, 철도 등 교통안전 선진화			
	범죄 피해자 보호			
	화재 취약 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대분류	중분류	국정과제
정책목표과제	산업안전	산업재해 관리체계 확대 및 기능 강화
		최고의사결정자의 안전준수의무 및 책임성 강화
		노후 산업단지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 개편
		소규모 산업체 안전인프라 강화 지원
	안전복지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자살 예방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실효성 있는 재난 피해자 보상 기준 및 구제 대책 마련
	환경보건	감염병/신종감염병 관리체계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생활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환경 위협 감소대책 마련
	신종위협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협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
		에너지 안보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특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신기술(ICBM, 로봇, AI 등) 대응 안전망 구축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
		데이터 대응체계 강화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2017: 11-13)과 채종현(2017: 3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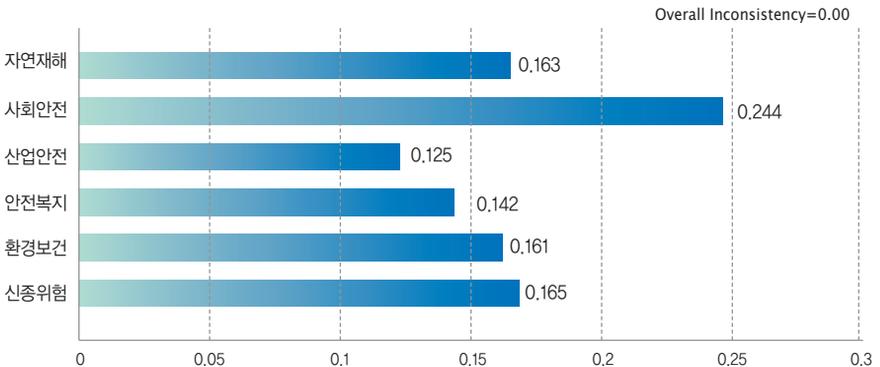
최 피해자 보호, ③ 화재 취약 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④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 셋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① 산업재해 관리체계 확대 및 기능 강화, ② 최고의사결정자의 안전준수의무 및 책임성 강화, ③ 노후 산업단지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 개편, ④ 소규모 산업체 안전인프라 강화 지원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 넷째, 안전복지 분야에서는 ①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② 자살 예방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③ 실효성 있는 재난 피해자 보상 기준 및 구제 대책 마련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 다섯째,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① 감염병/신종감염병 관리체계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 ②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③ 생활화학물질 안전관리 강

화, ④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환경 위험 감소 대책 마련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 여섯째, 신종위험 분야에서는 ①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 ② 에너지 안보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③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특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④ 신기술(ICBM, 로봇, AI 등) 대응 안전망 구축, ⑤ 사이버 위험 대응체계 강화, ⑥ 대테러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 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중 6개 분야별 정책목표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sup>12</sup> 사회안전(0.244), 신종위험(0.165), 자연재해(0.163), 환경보건(0.161), 안전복지(0.142), 산업안전(0.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 분야가 타 정책목표과제보다 높게 조사된 것은 교통안전,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등 우리 사회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가 재난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증진을 위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회안전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 정책목표과제 6개 분야별 우선순위 조사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2017: 16)에서 재인용

12 이하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2017: 16)과 채중현(2017: 40)의 내용을 재인용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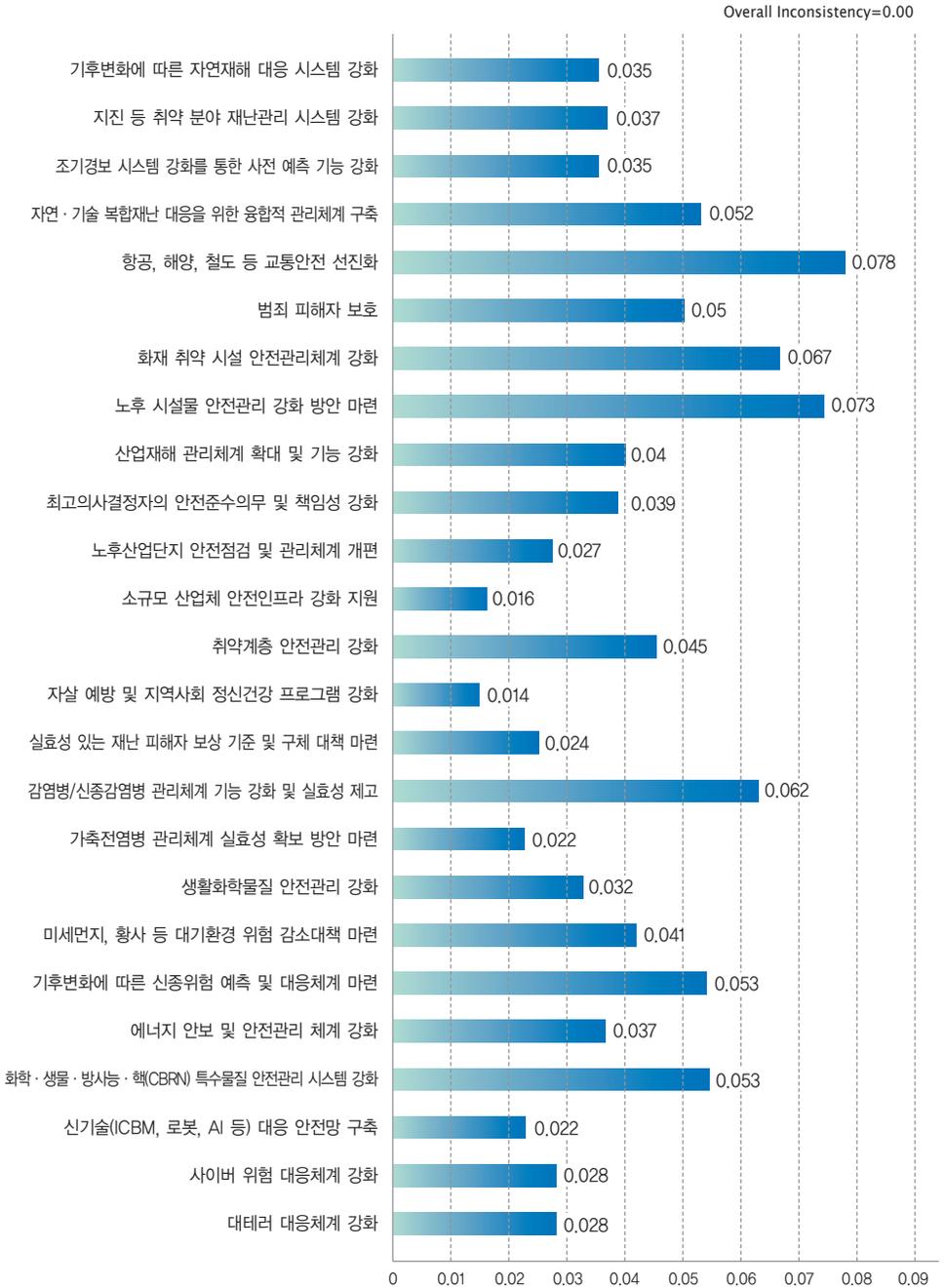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증진을 위한 이슈 중 정책목표과제 전체 25개 국정과제(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sup>13</sup> 우선,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선진화(0.078), 노후 및 화재 취약 시설물 관리체계 강화(0.073/ 0.067)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외에도 신종위험의 증가 및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0.053), 방사능·핵 등과 관련한 특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0.053)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우선, 재난안전 증진을 위한 중요 국정과제로 항공·해양·철도 등 교통안전 선진화와 그 뒤를 이어 노후시설물과 화재취약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삶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야의 안전에 대한 우선적 고려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이 상위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의 증가와 그 피해로 인해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이슈 및 국정 아젠다로 전문가들은 ①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선진화, 노후 및 화재취약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② 신종위험의 증가 및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 ③ 방사능·핵 등과 관련한 특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선정하고 있다.

13 이하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2017: 17)과 채종현(20172: 47)의 내용을 재인용했음.

〈그림4〉 재난안전 분야 이슈 및 국정과제 우선순위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2017: 18)에서 재인용.

#### 4. 추가적 제안

본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향하는 방향과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주요 이슈 및 추진 과제들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에 대한 고민과 추진 노력도 추가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14</sup>

첫째,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종래 우리 사회에 노정된 여러 난제들(각종 자연·사회재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등)을 뛰어넘어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위험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② 예측 불가능한 자연·사회·복합재난 및 관련 사고 발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인프라의 구축(사전적 체계)과 재난 관리 추진 및 집행체계의 내실화, 복구체계의 과학화(사후적 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③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역시 사전·사후적 관점을 포괄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예방적 관점의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각 재난관리 주관기관들의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④ 복구 측면에서도 단기 복구와 장기 복구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재난 발생 후 단기적 복구는 물론 장기 복구(재난 후 갈등 관리, 트라우마 관리, 보상체계 확립 등)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사회·자연·복합재난의 효과적 대응과 일상으로 보다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력(복원력, resilience)의 개념을 재

14 이하의 내용은 최호진(2017: 40-43)의 연구 내용을 재구성했음.

난관리 정책에 도입함으로써, 포괄적인 재난관리체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회복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강화, ② 회복력 관련 지식 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③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맞춤형 평가 방법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둘째, 원활한 정보·자원 공유와 현장 중심의 효과적 대응을 기반으로 한 국가 재난관리 추진체계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명확한 지휘·명령체계 확립(전담 부처와 각 집행 주체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②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의사결정 체계 마련, ③ 위험 정보 공유를 통한 이해 당사자들 간 쌍방향 소통구조 확립, ④ 통합 재난안전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재난자원 관리의 공동 활용 효과성 제고 및 신속한 자원동원 역량 확보<sup>15</sup>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예전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위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재난안전 관리체계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종 전염병, 전 지구적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재난 등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요구되며,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체계화된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위험 정보의 교류 역시 추진되어야 한다.<sup>16</sup> 그리고 취약계층 및 취약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노력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sup>17</sup>, ② 범부처적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의 내실화 추진<sup>18</sup>, ③ 생

15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현행 정부와 민간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16 미디어와 웹 등을 통한 위험 관련 정보의 사전 공개,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됨.

활밀착형 안전인프라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9</sup>

- 17 혐오범죄(hate crime)나 묻지마 범죄 등과 관련한 정보 축적,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함.
- 18 범부처적인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 구축 및 자살 예방 전략의 개발 등을 위한 자살 관리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자살 고위험군 관리 및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시행, 자살 관련 통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함.
- 19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위해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 인프라 관련 규제 및 정비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의 도입과 생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추진해야 함.

-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더불어민주당 (2017).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
  - 정지범 (2014).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KIPA 연구 과제 보고서.
  - 채중현 (2017). 『새 정부의 사회통합/재난안전 분야 국정 아젠다와 우선추진과제』, 『제7차 KIPA KAPA 정부혁신 Forum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 최호진, 오윤경 (201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KIPA 연구과제 보고서.
  - 최호진, 오윤경, 정소윤, 최공필, 김종업 (2017).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 행정관리 중심으로』, SW정책연구소(SPRI) 연구보고서.
  - 최호진 (2017). 『제2장 재난관리체계 환경 분석』, 오윤경, 최호진, 류현숙, 허준영 (2017).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체계 연구 : 위기경보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KIPA 수시과제 보고서.
  - 규제연구센터, 안전통합연구부 (2017. 5). 『ISSUE PAPER-정부 혁신 아젠다(II) : 규제 · 안전통합』 통권50호.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 (2017). 『국민 안전문화 교육 추진체계 및 기능강화 방안 연구』, 용역과제 최종보고 발표자료.

편용우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 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

“ 재해는 ‘반드시’ 일어난다.  
언제나 그렇듯 재해는  
인간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 이상의 위력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뉴스 기상캐스터의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라는 말이  
매년 되풀이되고, 각종 법규를  
무시하여 벌어지는 참사를 볼 때마다,  
자연의 힘과 법과 제도의 틈을 파고드는  
인간의 탐욕이 있는 한 재해를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

## 1. 한국을 덮친 지진 공포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지진,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뿌리째 흔들었다. 사람들은 지진 매뉴얼을 찾아 앞 다투어 서점으로 향했고,<sup>1</sup> 정부는 오래된 행동요령을 고치기에 바빴다.<sup>2</sup> 경주지진 당시에는 놀란 시민들이 일시에 소방서와 경주시청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기관의 재난 상황 대응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때 지진 시 행동요령에 목말라하던 사람들이 서로 공유했던 매뉴얼은 다름 아닌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배포한 『도쿄방재(東京防災)』였다. 경주시청 역시 『도쿄방재』의 필요 부분만 인쇄해서 시민들에게 긴급 배포할 정도였다.<sup>3</sup>

도쿄도가 2015년 9월 1일, 도내의 일반 가정에 책자 형태로 무료 배포한 『도쿄방재』는 도쿄 도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전문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쿄도는 일본어뿐 아니라 한국어, 영어, 중국어판도 준비해놓아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이 지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 특히 도쿄 인근 주민들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쿄 도심 바로 아래를 진앙지로 하는 대규모 지진(수도직하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 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도쿄방재』 역시 이러한 불안감에 의한 책자이기도 하다. 도쿄도청의 준비가 뜻하지 않게 2016년 경주에 도움을 준 것이다.

1 「한반도 지진 공포에 관련 도서 판매 870% 급증」, 『동아닷컴』, 2016. 9. 23. 기사.  
(<http://news.donga.com/3/07/20160923/80415091/2#csidx786fba397a515d7ba4c55ba7ec5bf05>)

2 「국민안전처, 17년 된 '구닥다리' 지진 매뉴얼 사용」, 『한겨레』, 2016. 10. 5.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4192.html#csidx51bb67146a03757a0ae2e13ab6f544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4192.html#csidx51bb67146a03757a0ae2e13ab6f5444))

3 경주아이쿱생협은 경주지진 이후 자체적으로 지진재난위원회를 구성했고, 일본 도쿄방재 매뉴얼을 기본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재편집하여 미니북 형식으로 인쇄해 배포했다. (편집자 주)

일본에서는 진도 2 이상의 지진이 2018년 1월 한 달 사이에 51회 있었다.<sup>4</sup>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진도 2 이상 지진은 1년에 40~60회에 불과했다.<sup>5</sup> 지진 발생 횟수는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나라가 지진에 대한 극심한 온도차를 보였던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진도 2 이상의 지진이 2016년에는 252회, 2017년에는 224회 발생해,<sup>6</sup> 한 달 평균 20회 정도의 지진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일본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 이상 지진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접하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지진을 공부하고 대비해야만 한다. 지진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위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지피지기<sup>知彼知己</sup>면 백전불태<sup>百戰不殆</sup>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웃나라 일본은 오랫동안 지진을 겪으면서 축적해온 경험이 풍부하다. 게다가 기후와 자연환경이 비슷한 것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가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은 일본이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이룩한 지진 대비 결과들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 2. 방재(防災)에서 감재(減災)로

종래에는 자연재해를 과학기술로 막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즉, 방재(防災)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토목이나 건축공학에서 이를 담당해왔다. 한편 인재(人災)는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대응해왔다. 주로 행정학이나 법학 분

4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data.jma.go.jp/svd/eqdb/data/shindo/index.php>)

5 한국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weather.go.kr/weather/earthquake\\_volcano/domestictrend.jsp](http://www.weather.go.kr/weather/earthquake_volcano/domestictrend.jsp))

6 상동 홈페이지.

야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한 기술은 진동을 견디는 내진耐震, 진동을 제어하고 흡수하는 제진制振<sup>7</sup>, 진동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면진免振<sup>8</sup>까지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일본 역시 정부 주도로 방재시설 건설을 추진해왔다. 지진해일을 막기 위한 방파제防波堤,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도쿄 지하에 매몰된 6.3km에 달하는 수도권외곽방수로首都圏外郭放水路와 같은 시설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큰 지진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건축기준법과 건축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해 내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일본이지만 주기적으로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는다. 진도 7의 동일본대지진이 있고, 사상 최악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충격에 휩싸인 일본의 매스컴에서 유행어처럼 ‘상정의想定外’라는 말이 떠돌았다. ‘상정’이란 미리 예상하고 정해놓은 상황을 의미하는데, ‘상정의’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정의’는 진도 7이라는 지진의 규모가 아니었다. 규모에 비추어볼 때 동 일본 지역의 가옥 붕괴는 많지 않았다. 24,598명이라는 희생자의 90% 정도는 지진해일로 인한 의사였다. ‘상정의’는 지진해일의 크기와 이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견잡을 수 없는 폭주였다.

일본이 진도 7을 상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1995년에 고베대지진神戸大地震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 150만의 도시 고베에서 발생한 진도 7 규모의 지진, 게다가 진앙지가 도시 바로 밑인 수도 직하지진이었던 고베대 지진은 사망자 6,436명이라는 깊은 상흔을 남겼는데, 그 대부분이 건물

7 타이완에 있는 타이페이101의 마스코트는 댐퍼베이비(Damper Baby)이다. 동그란 얼굴의 이 주인공의 정체는 86층에 위치한 댐퍼(완충기)인데, 이 거대한 댐퍼는 지진의 진동을 건물대신 받아들여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건물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8 지면과 건물 사이에 고무나 바퀴 등을 사용한 면진 장치를 두어 지반과 건물을 분리시켜 진동을 무마시키는 방식. 요즘 가장 각광받는 방식이다.

붕괴와 화재에 따른 희생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는 2000년에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동일본대지진의 건물 붕괴는 크게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베대지진 희생자의 10%에 해당되는 약 600명의 사망자가 주택이 붕괴되지 않았음에도 집 안에서 가구에 깔려 희생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앞 다투어 가구 전도<sup>顛倒</sup> 방지 상품들을 찾았다. 정부의 법률 개선과 시민들의 생활 위험요소 개선 의지가 맞물려 일본은 고베대지진 이후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앞서 예로 들었던 『도쿄방재』는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예측된 수도 직하지진’이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포함된 만화 「TOKYO “X” DAY」 역시 도쿄를 강타한 진도 7의 상황을 설정하고, ‘이것은 만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까운 미래, 확실히 현실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다’는 경고로 끝맺고 있다. 일본에서 재해란 반드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쩌면 ‘호들갑’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이러한 인식 뒤에는 위와 같이 반복되는 실패와 보완이 있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아무리 재해 상황을 상정해 준비해도 재해는 반드시 ‘상정외’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재해 패러다임은 재해를 막는 방재<sup>防災</sup>에서 재해를 감소시키는 감재<sup>減災</sup>로 바뀌는 추세이다.

감재는 교토대학<sup>京都大學</sup> 방재연구소<sup>防災研究所</sup> 소장 가와다 요시아키<sup>河田惠昭</sup>가 중심이 되어 주창되었다. 가와다 소장은 감재의 방법으로 ‘가정 내에서의 자조<sup>自助</sup>, 지역 내의 커뮤니티가 돕는 공조<sup>共助</sup>를 장려’했다.<sup>9</sup> 자조란 스스로 재해를 대비하는 것, 공조란 스포츠나 취미 동아리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가 서로 재해를 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국가의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의미하는 공조<sup>公助</sup>, 개개인이 서로 돕는 호조<sup>互助</sup>를 더해 4조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호조를 제외한 나머지

9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 (<https://kotobank.jp/word/%E6%B8%9B%E7%81%BD-674864>)

3개에 대해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 3. 시민들의 준비 : 자조(自助)

일본의 크고 작은 쇼핑몰에 가면 방재용품 코너에 상품이 그득하다. 손전 등에서 라디오, 호루라기와 같은 비상용품부터 장기 보존 가능 식수, 통조림, 즉석밥과 같은 비상식량, 손난로, 비옷, 침낭과 같은 방한용품까지 서로 다른 상품들이 '방재'라는 공통분모로 모여 있다. 쇼핑몰을 찾은 사람들은 한 곳에서 쉽게, 필요한 물품을 전부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거기에 평소에 방재용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는 덤이다.

오프라인 매장뿐이 아니다.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sup>楽天, Rakuten</sup>에서는 약 64만 5,000건의 방재 관련 상품이 검색된다. 100엔 미만의 알루미늄 재질의 보온시트와 휴대용 화장실부터 10만 엔이 넘는 비상용 발전기까지 상품이 매우 다양하다. 그에 비해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3,000건 정도가 거래되고 있으며, 이마저 대부분은 일본에서 기획된 상품이다. 이처럼 한일 간의 재난 대비 문화 차이는 마트만 둘러봐도 확연히 느껴진다.

일본인들이 일상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이유는 지진과 태풍으로 대변되는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은 2,025건이었다. 과거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에 약 1만 건, 쿠마모토<sup>熊本</sup> 지진이 있었던 2016년에 약 6,500건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매년 2,000건 전후의 지진이 발생해왔다.<sup>10</sup> 매일 일본의 어디인가에서는 5~6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실

10 <http://www.hazardlab.jp/know/topics/detail/2/3/23297.html>

로 일상적이라는 말이 어울린다.<sup>11</sup>

일본 안전문화의 뿌리는 철저한 교육과 지진 체험에 대한 공유에서 비롯된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대화 교육 이전에는 각종 재해 기록이 교과서 역할을 했다. 일본 최고最古의 공식 역사서라고 하는 『일본서기日本書紀』를 비롯해 각종 일기, 수필류에도 지진과 기근, 홍수 피해 기록이 생생하다.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호조키方丈記』(13세기 성립)에는 1185년 7월 9일 교토京都 일대에서 발생한 분치지진文治地震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매우 큰 땅울림이 있었다. 그 모습이 일상생활과는 달라 산은 무너지고 강은 메워졌다. 바다는 기울어 육지를 삼키고 땅이 갈라져 물이 나왔으며 바위가 갈라져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다. 모래펄에 올라앉은 배는 파도에 출렁였으며 길을 재촉하는 말은 헛발을 디뎠다. 서울 부근의 집 곳곳에는 집이나 탑, 사당 등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떤 것은 무너지고 어떤 것은 기울어 있었다. 먼지가 일어 기세 좋은 연기처럼 보였다. 땅이 움직이고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마치 천둥과 같았고, 집 안에 있었다면 금세 압사할 것이다. 도망쳐 나오니 땅이 갈라진다. 날개가 없으니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용이 아니니 구름을 탈 수도 없다. 두려운 것 중에서도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지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흔들리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그 여진은 한동안 그치지 않았다. 세상이 놀랄 정도의 지진이 스무 번에서 서른 번 정도 매일 있었다. 열흘에서 스무날 정도 지나자 지진이 오는 간격이 길어져 어떤 때는 4, 5번, 어떤 때는 2, 3번 하루나 이틀, 사흘 정도에 1번 정도 흔들림이 있었다. 여림잡아 여진이 석 달 정도는 계속되었다.

11 한국에서는 경주지진이 있었던 2016년에는 55회, 포항지진이 있었던 2017년에는 98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교토는 근대 이전까지 일본 수도의 지위를 지키고 있어 인구도 가장 많았기 때문에 교토를 덮친 대지진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지진에 당황하는 모습은 강산이 수십 번이나 바뀐 지금과 비교해도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 기억을 공유하고 후대에 남겨 교훈으로 삼았던 것이다. 일본에는 이와 같이 지진 발생 일시, 규모, 피해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수많은 '지진지(地震誌)'가 존재한다. 다양한 신분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지진지'는 일본인들에게 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준비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근대 이전의 일본 사회에서 재해 정보의 숙지와 공유는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안전교육이었던 셈이다.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기록물에도 유난히 '잊지 않겠다(忘れない)'라는 말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은 재해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안전문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을까. 일본의 안전교육은 보육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보육소 보육지침(保育所保育指針)에서는 '재해나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한 장소 점검 및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외부의 수상한 사람의 침입 방지를 위한 조치와 훈련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필요한 대응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의 정신 보건 대응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재해 대피 훈련을 행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대피훈련으로 몸에 익힌 안전의식은 절체절명의 재해 발생 시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재해에 대비하는 시민들의 조직으로 '소방단(消防團)'을 들 수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에는 2,209개의 소방단에서 850,331명의 소방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소방단이 민간조직이라고는 하나 중앙정부의 소방조직법과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준 공공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방단원들

은 평소에는 본업에 종사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출동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소방단은 본래 인구 1,000만의 대도시였던 에도江戶(도쿄의 옛 지명)에서 화재가 빈발했기 때문에 관의 명령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었다. 일본 근대 정부는 1868년 이후 근대적인 소방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지만,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방 단원을 모집, 관리해왔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에도 소방단의 활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재 활동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진해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岩手県の 리쿠젠타카타陸前高田의 소방단장이었던 오사카 준大坂淳은 아내와 어린 딸을 뒤로 하고 소방단원들과 마을 사람들의 구조를 위해 대피소로 달려가 다수의 소방단원들과 사람들을 해일 위협으로부터 대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가족은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소방단원 역시 128명 중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소방단원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던 오사카 준은 ‘소방단원복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보다 앞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해일이 닥친다는 소식에 위협을 무릅쓰고 수문을 닫기 위해 수문통제소로 뛰어간 미야코시宮古市の 소방단원도 있었다.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낸 동일본대지진이었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구조와 피난 활동이 없었다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 4. 공공기관의 준비 : 공조(公助)

한국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받게 되는 것은 전입신고 확인증 1장뿐이다. 전 입자에게는 쓰레기 분리수거나 마트의 위치, 버스, 병원 위치까지 모든 것이 낯설기 마련이다. 하물며 대피소를 알 리 만무하다. 그러나 재해는 모든 사람이 그 지역과 지형에 익숙해지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는 관

광이나 사업차 방문한 외부인,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는 어떤 지자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때 두툼한 책 몇 권을 건네받는다. 내용물은 행정 서비스 안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문화 시설 안내, 해저드 맵<sup>hazard map</sup> 등이다. 해저드 맵은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지진해일 시 위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대피소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다국어로 준비된 곳도 있으며,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차역이나 전철역 출구에, 대로변에, 그리고 교차로 부근에는 어김없이 다국어로 대피소를 안내하는 지도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종이 지도나 지도 간판. 너무나 아날로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디지털 강국인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요즘 종이 지도를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아날로그적 도구들은 비효율의 대명사라도 같다. 그러나 재해가 닥치면 효율로 무장한 스마트폰이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재해 상황에서 트래픽 증가로 인해 하루밖에 이용할 수 없는 배터리는 금세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필요 정보 페이지는 다운되고 말 것이다. 이에 일본 지자체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용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지진과 같은 재해 발생은 순식간이지만, 그 피해는 몇 날 며칠이고 계속되기 마련이다. 포항지진 이후 대피소 생활이 몇 달이고 이어지는 것만 봐도 그렇다. 재해 발생 직후에는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 이후에는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도쿄였지만, 정전과 선로 안전 점검을 위해 수도권 전철망이 올 스톱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났다. 전철을 대체할 자동차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탓에 도로는 혼잡했다. 이로 인해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10만 명의 직장인들은 밤새 걸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도로변 편의점의 식료품은 바닥을 드러냈고,

뽕죽구두로 출근했던 여성 직원들이 맨발로 걷는 진풍경까지 연출했다. 밤새 영업하는 패밀리 레스토랑마다 화장실을 찾기 위한 기다란 행렬이 이어졌고,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길가에서 급한 용무를 해결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귀가 행렬에 일본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고 수준의 재해 대비를 한다고 자부하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때 ‘귀택난민(歸宅難民)’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후 일본 정부는 공공과 민간시설에 귀택난민들을 일시 수용할 수 있는 구호용품을 비축하고, 시민들의 귀가를 만류하는 계도를 시작했다. 또한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귀가지원 스테이션’으로 지정해, ① 수돗물, ② 화장실, ③ 지도를 이용한 도로 정보, 라디오 등을 통해 접수된 통행 가능·금지 등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했다.

## 5.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 : 공조(共助)

2014년 6월에 발행된 『방재백서(防災白書)』의 「특집, 공조에 의한 지역방재력 강화 : 지구방재계획 제도 시행에 맞추어」<sup>12</sup>에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서 공조(共助)의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사례1〉

60대 여성 A씨는 해안에서 일을 하던 중에 지진해일을 보고 고지대에 있던 자택 2층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해일에 의해 자택이 100m 정도 떠내려가서 붕괴된 집 안에 고립되었다. 집이 떠내려간 곳이 우연하게도 지역 주민들이 모여

12 일본 내각부(内閣府) 홈페이지. ([http://www.bousai.go.jp/kyoiku/pdf/guideline\\_separate.pdf](http://www.bousai.go.jp/kyoiku/pdf/guideline_separate.pdf))

있는 장소였다. 많은 주민들이 2시간에 걸친 구출 활동에 참여해 A씨를 구해 주었다.

#### 〈사례2〉

60대 여성 B씨의 경우 자택에 있을 때 재해가 발생했다. 지역 주민이 지진해일을 발견했을 때 별다른 대피 방송이 없었기에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변의 주민들이 협력해서 대피할 수 있었다.

#### 〈사례3〉

60대 남성인 C씨는 자택에 있었을 때 재해가 발생했다. 집에 있던 라디오로 지진해일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운 대피소로 피난했다. 대피소에서는 스스로 리더가 되어 지역의 이재민들을 중재하고 이끌어서 대피소 청소, 소독을 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피소 운영을 도왔다.

#### 〈사례4〉

30대 여성인 D씨는 외출 중에 재해를 당해, 이후 재택 피난을 했다. 그때 지역 간부들이 경비, 정보 전달, 생필품 지급 및 지원 등을 받아 아파트 재택 대피를 계속할 수 있었다.

즉, ① 붕괴된 자택에서 구출된 사례, ② 서로 도와 대피한 사례, ③ 서로 도와 대피소를 운영한 사례, ④ 이웃끼리 서로 도와 재택 대피를 한 사례가 그것이다. 공조의 특징은 미리 조직되어 있던 공동체를 재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재해 관련 활동이 감재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은 재해 상황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베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 2016년의 쿠마모토 지진 熊本地震에서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會(이하 일생활협연합회)

는 큰 역할을 했다.

일생활협합회는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사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계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각 단위 조합별로 확립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각 단위 조합을 연결하는 간단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경우 '상정외'의 규모로 재해가 발생하자 정작 지진해일 피해가 심했던 연안지역의 단위 생협과는 연락이 두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어쩔 수 없이 각 단위 생협은 단독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식료품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마트 영업을 계속하고, 때로는 택배나 이동식 마트를 열어 이재민들을 지원했다. 또한 각 단위 생협 조합원들은 무료급식소를 열거나 이재민들의 이사를 돕는 등의 자원봉사에도 힘을 모았다. 일생활협합회는 단위 생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 피해 지역 생협은 2011년 3월 11일, 지진 발생 당일에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공급.
- 자치단체나 피난소에 지원 물자를 전달.
- 생협의 배송 트럭을 이용하여 자치단체나 피난소로 보내는 지원물자 배송에 협력.
- 전국의 생협도 재빨리 지원 활동을 시작.
- 2011년 4월 28일까지 트럭 총 1,190대, 지원자 총 3,587명을 파견. 식품, 연료 등 약 71만 점(트럭 약 370대 분)의 물자를 지원.
- 일생활협합회, 지진 발생 다음 날 아침, 센다이 시내에 10톤 트럭 4대 분의 지원 물자를 보냄.
- 이후 거래처와 전국 생협의 협력을 통해 4월 6일까지 식료품 등 1,170만 점

13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자료집, 『記録2013 生協のつながる力』  
(<https://shinsai.jccu.coop/tsunagaru/2013/pdf/tsunagaruchikara2013.pdf>)

(10톤 트럭 633대 분)을 배송.

—생협공제 가입자 방문(5월 24일까지 총 2,736명).

생협의 공조는 피해 지역 지원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재해 복구가 더딘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진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sup>岩手県</sup>의 이와테생활협동조합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3회에 걸쳐 해당 지역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피해 농민들을 돕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이후 대피한 사람들, 특히 청장년층이 돌아오지 않아 마을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축제이다. 각종 마쓰리<sup>祭り</sup>로 대표되는 일본의 지역 축제는 보통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실행된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반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걸치는 축제를 외지로 나간 청장년층을 다시 불러 모으는 기회로 삼고, 관람객을 모아 지역 활성화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위의 이와테생활협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 6. 그래도 재해는 반드시 일어난다

일본이 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살펴보았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해는 ‘반드시 일어난다. 언제나 그렇듯 재해는 인간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 이상의 위력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뉴스 기상캐스터의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라는 말이 매년 되풀이되고, 각종 법규를 무시하여 벌어지는 참사를 볼 때마다, 자연

의 힘과 법과 제도의 틈을 파고드는 인간의 탐욕이 있는 한 재해를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사실 재해가 발생하고 희생자가 생기는 구조는 복잡한 듯 보이지만, 모두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다. 바로 '설마'라는 방심이다. '설마 저 차가 나를 치겠어?', '설마 저 크레인이 넘어지겠어?', '설마 지진이 일어나겠어?' 라는 '설마'로 인해 재해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미국의 통계학자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1931년에 『산업 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그 이전에 유사한 원인으로 29명의 경미한 부상자가, 그리고 300명의 잠재적 부상자가 있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즉 사고는 무수히 많은 전조가 있고 이를 알아차려 미연에 방지한다면 인명사고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위의 대형 인명사고가 '인재(災)'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글이 300명의 잠재적 부상자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임남희

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힐링센터0416심과힘  
사무국장

##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

“ 사회 생태계가 외부 교란을 겪으며 재조직화하는 데 성공하려면 과거에 겪은 비슷한 사건들을 기억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과거의 전략을 기억하며 이를 다시 새로운 지식 체계와 연계하여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원이 의사결정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전향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 1. 공동체의 안부를 묻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활동가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2018년이 밝아오고 한 달이 지난 후였다. ‘이웃, 안부를 묻습니다’를 모토로 활동을 한 지 4년째 되어가지만, 그동안 동료들에게는 그 ‘안부’를 묻는 데 인색하기만 했다. 마을 활동가와 함께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무엇을 할까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하나의 현실을 공유했다. ‘공동체’라는 주제가 있어야 공공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공동체의 의미가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모두가 답답해하는 상황이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매일매일 실천해가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다.

강신주(2011)는 레비나스Levinas의 『시간과 타자 *Le Temps et L'autre*』를 인용하며 “타자가 나와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할 때, 그는 스스로 하나의 주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는 다른 사람이 나로 환원될 수 없는, 다른 사람만의 고유한 주체성의 근거로도 활용한다. 고유한 주체성을 가진 개인이 집단에 매몰되는 순간,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자신만의 고유성, 혹은 주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세월호 참사 초기에는 유사한 감정으로 위로와 연대 그리고 분노의 언어를 사용했다. 4년이 지난 지금, 당사자들이 바라는 ‘기억’과 다른 사람들의 ‘기억’은 다른 감정과 다른 의견, 주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과 의견이 집단으로 모여 ‘맞다’ ‘틀리다’로 나와 타자의 차이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라는 집단성은 “타자를 자신과 얼굴을 맞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과 나란히 서 있는 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 레비나스의 말을 참고한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 회복해야 할 공동체는 나와 다르게 존재하는 모든 것과 어떻게 함께 지낼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비슷함을 넘어 똑같아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 사회를 ‘가

만히 있으라' '이제 그만'이라는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나와 함께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사람들의 다른 생각과 다른 욕구가 마을과 지역사회 안에서 나란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2018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폐허가 된 재난 상황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석한 레베카 솔닛은 그의 책 『이 폐허를 응시하라』를 통해 재난의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라곤 하는 현상을 찾아낸다. 그리고 참여와 주체성, 목적 의식과 자유가 적절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재난은 재난일 뿐이라며, 재난 현장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하게 동요하여 다른 가능성에 귀를 닫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막상 닥치면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재난을 통해 발견된 연대와 대처라는 사회적 소망과 사회적 가능성은 '가만히 있으라'와 '이제 그만'이라는 지배 담론을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탐색적 성찰 질문으로 전환한다.

안산시 고잔동 주민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을 견디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달라지기 바라는 변화를 상상한다. '2017년 고잔동 마을상상마당 상상톡톡 워크숍'에서 통반장 및 단체장이 뽑은 우리 마을 키워드는 관심, 배려, 소통, 나눔, 안부 묻기, 마음 맞추기, 대문 열기, 이웃 알기, 공동체, 같이, 변화, 이웃사촌, 사랑방, 향수, 행복한, 책임, 단합, 향수 등이다. 고잔동 주민들은 동네의 특징으로 어른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 골목골목 예쁜 동네, 유흥업소 없고 범죄 없고, 공원이 집 주변 양쪽에 있는 동네, 도보로 다니기 좋은 동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소리 없이 잘 도와주는 동네로 선정했다.

노진철(2015)은 재난이 닥치면 공동체가 단결하여 대처한다는 규범적 요청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며, '달리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우연적이라고 해석한다. 재난은 규제와 탈규제의 혼란

이나 개인화된 자유, 위협에 대한 감수성 증대 등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약화된 공동체의 탄력성을 차별적으로 저해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이다. 재난으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논의하게 된다.

오혜영(2016)은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의 무책임과 도의적 실천의 외면이 만들어낸 사회적 불신과 배신이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굴욕감과 평가절하를 경험하게 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의 상처가 깊고 그 상처가 지역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겪는 트라우마(trauma)는 천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지역사회 집단 트라우마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바탕으로 안산 지역의 특성과 단원고가 있는 고잔동 마을 단위 주민들의 집합적 의견, 다양한 재난을 분석한 연구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대응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또한 개인의 어려움이 집단으로 연결되어 드러나는 집단 트라우마의 위험과 약화된 공동체 탄력성을 파괴할 수 있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

## 2. 대안적 패러다임을 찾아서<sup>1</sup>

패러다임(paradigm)은 현실세계의 복잡한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이자 세계관인 동시에 일반적인 관점이다(Lincoln and Guba, 1985). Schutz(1944)는 패러다임을 “집단적 삶에 대한 문화적 유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Kuhn(1970)은 “기존의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 신념, 가치, 기술 등

1 이론적 배경 대신에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와 사회자본 이론을 재구성했다.

을 망라한 총체적인 구성물”로 패러다임을 규정했다.

패러다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가치, 지식, 신념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구성된다.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그 세계의 가치, 지식, 신념은 대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그것의 존재와 존재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사회 현상의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요인들을 알 수 있다면, 자신과 타인은 물론 주변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의미에 대한 과거의 관점들, 현재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이 용어는 인간성(humanness) 자체의 의미를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과 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매우 상이하지만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두 가지 유형의 패러다임으로 전통적 패러다임과 대안적 패러다임이 있다.

전통적 혹은 지배적 패러다임(traditional or dominant paradigm)은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패러다임 또는 세계관이며, 지역사회 욕구를 규정하는 접근 방법인 양적조사에 많이 사용된다. 다수의 의견을 인지하고 대응하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고려되어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 다른 유형인 대안적 또는 가능한 패러다임(alternative or possible paradigm)은 인간 환경에 대한 개인과 타인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주목받지 못한 세계관으로, 주로 질적이고 주관적 접근 방법에 적용한다.

특정한 지역사회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첫째,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실천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질문자와 질문 방식을 결정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실제 삶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욕구를 찾아 이해

하는 데 관심을 둔다. 셋째, 실천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욕구를 발견하고, 주민들이 표현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수집하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수행한다. 넷째, 실천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원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제 대안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 논의 중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조직이나 관계 형성에 있어 상호 신뢰, 친화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 등이 핵심적 구성 요소가 된다. 이는 세계은행 World Bank은 물론 Mathbor(2008)가 논의한 바와 같이 공동체 내의 유대, 공동체 간의 연결, 그리고 국제적 기구를 포함한 재정적 지원 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라는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동체 내의 유대는 첫째, 공동체 내부 구성원 주체들의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대의를 위해 배려 혹은 양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건강함을 유지하는 뿌리로, 다른 공동체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특성을 책임과 권리로 무장하여 다른 공동체와 튼튼한 윤리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둘째, 공동체 간의 연결은 다른 언어<sup>2</sup>와 다른 문화를 가진 공동체와 갈등을 유발하고 긴장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관계적 숙명을 이해하고, 다름과의 연결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 상생하는 예외를 자주 연출해내야 한다.

특히 Mathbor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그 유용성을 여러 사례로 입증했다. 이 모델은 유대bonds와 연결bridges 그리고 연계links를 강조한다. 각 단계는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개발을 포함한다.

2 이 글에서는 개별 주체들의 다른 의미와 해석을 드러내는 표현을 '언어'라고 총칭한다.

Mathbor는 해안지역을 강타한 자연재난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상호작용 및 연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효과적인 활용이 재난지역 공동체의 재난 대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잘 훈련된 공동체가 재난에 대응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 가족, 집단, 조직, 공동체, 사회의 수준에서 행해지는 인간 행동의 상호 보완성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가깝거나 친밀한 관계는 물론 모든 관계의 체계 속에서 항상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신뢰(낯선 사람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를 비롯한 비공식적이고 연합적인 네트워크의 총합을 의미한다.

Briggs(1997)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가족, 이웃, 도시, 사회체계, 문화체계의 수준에서 서로를 연결할 때 활용된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적 자본이 이웃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여 내에게는 이롭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유익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Schulman and Anderson(1999)은 사회적 자본의 활용 목적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처럼,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공동체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집단이 사회적 자본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이를 사용하려는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에 조언, 부탁, 정보 등을 주고받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면서 형성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일상적인 관계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사회적 자본은 불신으로 파괴되기도 하지만 미사용 시 소멸된다는 점에서 엔트로피 체계와도 유사하다.

가난하고 권리가 박탈된 공동체일지라도 상당량의 사회적 자본을 보유한 경우가 있다. 문제는 가교적 사회자본이 결여된 경우, 다시 말해 공동

체가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기관들과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다. 국지적 사회자본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라면, 가교적 사회자본은 공동체와 조직을 다른 공동체와 조직들에 연결시키고 축적한다. 가교적 사회자본은 사회적 자본을 금융자본, 물적자본(공공건물, 회사, 학교, 유행재화, 장비 등), 인적자본과 연결하여 보다 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자원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Wallis(1998)는 어떤 공동체가 비공식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역량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지적 사회자본과 가교적 사회자본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의 빈민가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많이 참여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큰 도시나 지역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동체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통제자, 규제자, 공급자에서 촉매자, 회의 소집자, 촉진자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 프로그램이 공동체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참여자들을 단순한 의뢰인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하여 촉진적이고 참여적인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 3. 세월호 참사 이후 고잔동에서 실천한

####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경험에 대하여

2014년 4월 16일 이후 476명에 이르는 피해자(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과, 이를 지켜보며 슬픔과 아픔을 함께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트라우마 치료 필요성이 정신건강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실제 마을 안에서 참사를 경험한 대다수의 이웃들은 답답함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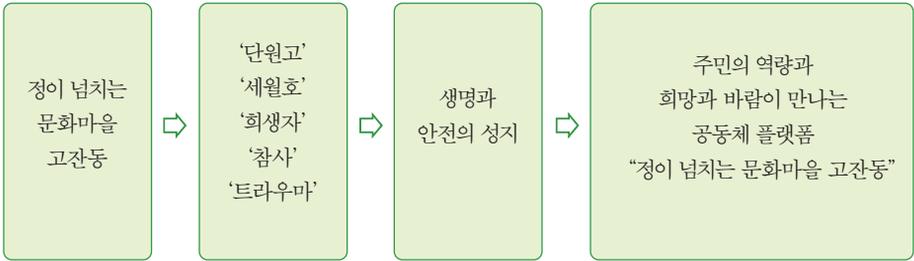
재난 직후 급성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사 초기에는 학교와 피해 가정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전문가 및 상담 전문가 개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의료적 치료나 위기에 대한 개입은 개별적 필요에 의해 해결하는 수준이었다.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고잔동 주민들은 이웃 아이들을 잃은 당혹감, 수많은 취재진과 애도 인파에 일상생활이 변형되는 어려움에도 참사에 대한 예의로 묵묵히 견디고 있었다. 참사 초기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목격자이고 경험자이며 피해자였다. 특히 심리적 충격을 받은 12만 명의 마을공동체(고잔1동, 와동, 선부3동 지역)와 73만 명의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는 대안적 프로그램의 지속인 운영과, 그에 대한 가치 합의가 가능한 파트너가 필요했다.

중앙집권적이고 전문가 중심의 개입은 재난 공동체의 복원을 지역사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형성되지 않는다. 보다 대안적 방안을 숙고해야 했다. 재난을 겪으며 더욱 강해진 이웃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을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천 과제로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줄곧 진상 규명을 위해 위로를 받을 시간도 없이 풍찬노숙 중인 희생자 가족들이 다시 마을로 귀환할 때 따뜻한 마음과 포용으로 안부를 묻는 마을공동체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기반한 의견을 반영했다. 자녀를 잃은 아픔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의 경험을 소중히 치유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찾아갈 수 있도록 지리적, 심리적 거리를 가까이 하는 ‘세월호 아픔 치유 공간’이 필요했고, 한편 그 공간이 재난 현장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와 거버넌스 탄생의 씨앗을 키워내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의견과 필요를 담아 ‘정이 넘치는 문화마을’ 고잔동을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치유 회복 공간이 마을 입구에 설치되었다. 개인의 필요를 집단으로 확장시킨 공동체의 연대가 세월호 참사를 견디고 있는 당사자와 이웃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 지나

가는 교회 옆에, 가장 가슴 아픈 현장이 있는 단원고 바로 옆에, 마을 가치를 전환하려는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이다.

〈그림1〉 고잔동 마을 가치 전환 흐름도



■ 세월호 다크 투어리즘<sup>3</sup> 길을 열다

: '재난에 강한 마을'이 '생명'과 '안전의 성지'로 성장한다

— 희생자와 이웃들을 나누는 '벽'이 있었다.

— 현재를 바라보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다리는 길을 만들었다.

— '소중한 생명길-단원소생길'이라 이름 지었다.

— 슬픔과 아픔이 남겨놓은 성찰은 지속가능한 연대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안부'

— '안부'는 기억을 승화하여 서로를 '응원'하는 행동으로 확대되었다.

■ 이웃들이 '마음의 일치'로 표현하다

: 공동체 회복은 기억이 승화되어 '응원'으로 연결되다

— 기억공연을 준비하며 가족의 여가를 선물 받았다.

3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1996년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으며,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고도 불린다. 밝은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중국 난징대학살 기념관,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같은 역사의 아픔과 고통이 있던 던 비극의 현장을 둘러보는 기억 여행이다. (편집자 주)

- 기억공연을 준비하며 접어두었던 소원 하나를 펼쳤다.
- 기회를 나누어준 아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냈다.
- 2015년 4월 이웃들이 기억을 승화하여 '응원'에 동참하여 아이들을 기억했다.
- 2015~2017년 3년간 이웃들의 승화된 기억공연 '응원'은 계속되었다.

■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기억하다

- : 이웃들의 추모꽃집에서 기억과 치유 그리고 이웃의 품격이 피어나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집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차려졌다.
- 주민들이 모이고 고르고 나누고 전해주었다.
- 예쁜 아이들을 닮은 꽃을 전하는 사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편안해졌다.
- 선한 마음은 SNS로 퍼져나가 10원이 모여 500만 원이 되었다.
- 4월이면 아파오는 마음을 “같이 가자” 서로 위로했다.

■ 416가족과 이웃들의 연결다리가 되다

- : 이웃들의 연결을 활짝 피어냈다
- ‘밥 한 끼 합시다’를 통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어째서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 두 번째 밥 한 끼 하면서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로 하나 되어 좋은 추모공원에 대한 공통분모도 찾아낼 수 있었다.
- 이웃사촌은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할 수 있게 되었다.
- ‘만개이웃창작공방’에서는 416가족들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집종을 통한 기술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다. 골목에서 만나면 먼저 달려가 ‘선생님’ 하고 불렀다.

■ 과거와 현재를 잇다

- : 고잔동에는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를 제일 잘 해설하는 ‘고아젤 마을해설사’가 있다.
- 3대를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가 ‘화정천 옛 이야기’로 흘렀다.

- 소생길을 해설하는 주민은 길에서 정이 넘치는 마을 문화를 만들어갔다.
- 고려시대 이야기에서 현재의 이야기를 해설하고 연결했다.
- 이로써,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갔다.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단체와 함께 나누다

- : 문화 참여 학교, 마을 역사 기록의 새 장을 열고 성과를 확장했다
- 청소년 뮤지컬은 동네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픈 '소금버스'와 연계해 진행했다.
- 우드버닝은 이제 쉽표와 소금버스에서 더 많이 진행하고 있다.
- 화정천 옛이야기는 어느새 마을 역사 기록의 참고서가 되었다.

■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회복하다

- 그 시작은 고잔동 주민들의 세월호 아픔의 치유공간이었으나,
- 3년간의 '상담코칭사업'은 안산 아픔의 치유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 다양한 대상에게 상시적으로 심리상담코칭 전문가가 시민들의 아픔과 함께했다.

■ 다양한 대상에 맞는 맞춤형 상담·코칭을 실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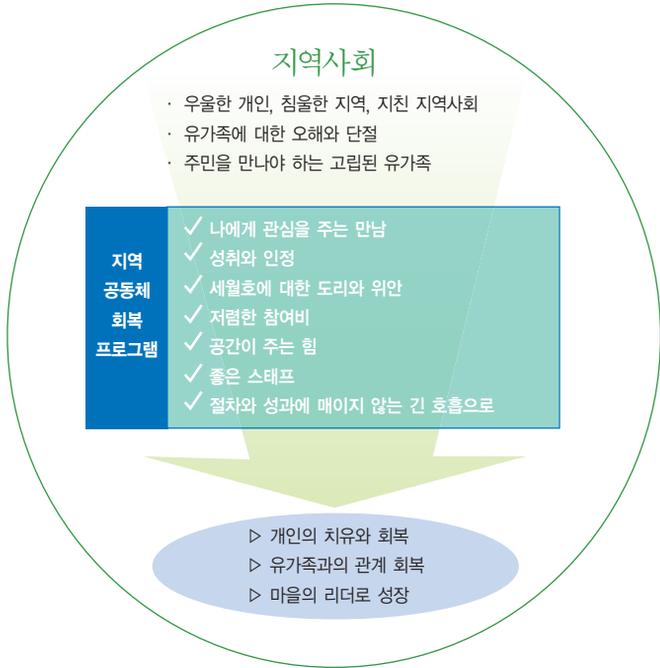
- 공통의 경험과 개별적 상황에서 맞는 상담과 코칭은 매우 높은 만족도로 드러났다.
- 희생자 가족 → 친구 → 이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 집단 프로그램은 개별 상담으로 심화되었고, 개별 상담은 집단 상담으로 확대되다

- 부모교육 코칭프로그램, 부부 테라피, 청소년 동작예술치료, 아동 집단놀이치료 및 노인 코칭사업 등은 참사 이후 삶의 방향 전환에 힘이 되었다.
- 단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동작예술치료는 세월호 참사 후 아픔으로 침 잠된 아이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 고잔동 주변 초등학교의 부적응 학생과 함께한 상담·코칭 프로그램은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학생·학부모 및 담임교사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한소정(2017)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지역에서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수행된 프로그램 경험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분석한 결과에서 공동체 프로그램의 맥락과 성과를 <그림2>와 같이 설명한다.

〈그림2〉 공동체 프로그램의 맥락과 성과



#### 4. 다양성이 공존하는 마을을 통한 회복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기억과 보존' 그리고 '치유와 응원'이다. 사고 이후 아이들을 위한 분향소가 동네 입구에 마련되고 국민들 모두 슬픔을 나누고, 비극에 동참하기 위해 더운 날씨와 긴 기다림에도 눈물로 애도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응어리를 풀어내고, 희생자를 애도하

며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등 레베카 슬  
넛이 밝힌 재난 현장에서 슬픔을 나누고 불안을 해소하는 풍요로움을 경  
험했다.

팬목항에서 자원봉사자는 도덕적 등가물로 작동했고, 보편적인 침착함  
으로 진상규명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패닉에 도전했다. 단원고  
학생의 부모에서 일순간 유가족이 된 '416가족협의회' 회원들은 공동체 내  
의 연대를 통해 진상규명 우선순위에 합의하여 4년간 사법적, 행정적, 문화  
적 변화를 선도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희생자 가족들이 피눈물로 만  
들어낸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데 이 사회적 자본을 사용하려  
는 집단과, 가능하면 새로 만들어진 대안과 연결되지 않으려는 '다른 공동  
체'와의 갈등과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sup>4</sup>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sup>5</sup>의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  
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두 개의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416가족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냈다. 법  
의 형평성에 입각하여 416가족들이 만들어낸 세월호 특별법과 사회적 참  
사 특별법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이득이 되는 법이다. 어떤 공동체  
에게는 참사 이후 규제되고 예방되어야 하는 문제의 씨앗이, 그들이 이전에

- 4 세월호특별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세월호 특별법 제1조) 이 법의 정식 명칭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2014년 11월 19일 제정됐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출처 : 다음백과)
- 5 2017년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가슴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새로 출범할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1기 특조위와 달리 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좀 더 온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해 1기 때는 해양수산부를 거쳐야 했지만 2기 특조위 위원장은 독립된 정부기관의 장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직접 협상이 가능하고, 특검 수사 요청 시 특검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9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등 1기 특조위에 견주어 2기 특조위의 위상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출처 : 다음백과)

누렸던 이득이었을 것이다. 그 이득을 누렸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자본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추모공원 장소 결정과 설치 시설에 대한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극단적으로는 ‘절대 반대’라는 수식으로 공동체의 이해와 생각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sup>6</sup> 제3자의 입장에서는 평화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되었을 때 다른 공동체와의 차이는 ‘주장’으로 전환된다. 내가 곧 공동체가 되는 집단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공동체를 연결하는 일은 공동체의 배타적 특성에 따른 관계적 숙명을 이해하고, 다름과의 연결이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 상생하는 예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적응형 거버넌스<sup>adaptive governance</sup>는 공동체 간의 연결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다시 디자인하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적응형 거버넌스는 자기조직화<sup>self-organizing</sup> 하고 자기능력화<sup>self-capacity</sup> 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라고 정의될 수 있다. 생태계 스스로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생태체계<sup>socio-ecological</sup>처럼 구성원들이 학습을 축적해가면서 외부 교란에 대처하고 회복하는 적응 능력을 가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지역 주민은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 속에서 학습하고 있으며, 이를 축적하고 있다. ‘한 목소리’, ‘다수의 의견’, ‘합의된 의견’이라는 외부 교란의 혼돈 속에서 공동체 내부의 유대로 집단 지성을 만들어 다른 공동체의 외부 재화를 수용해야 한다. 또 백년이 지나도 진리일 수 있는 윤리적 태도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실천하고 성장해야 한다. 사회 생태계가 외부 교란을 겪으며 재조직화하는 데 성공하려면

6 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 절대 반대 현수막이 주변 아파트 입구에서 다른 공동체의 추모 주장을 대신하고 있다.

과거에 겪은 비슷한 사건들을 기억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과거의 전략을 기억하며 이를 다시 새로운 지식 체계와 연계하여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원 모두 의사결정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전향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한소정은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세월호에 대해 각자의 마음 빛을 갠 속죄 의식儀式, rites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건강한 지역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별의 욕구와 마을의 욕구가 만나야 한다. 재난 공동체의 회복은 주민 한 명 한 명의 개인과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 모두를 위한 다양성이 공존하는 마을에서 시작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신주 (2011). 『철학이 필요한 시간』, 사계절.
- 김윤성 (2009). 「적응형 거버넌스(adaptive governance) 형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농업 행정과 지방행정의 결합」,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 김지수 (2016). 「계획도시 안산의 공간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분석 : 개발, 이주, 노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진철 (2015). 「재난에 노출된 공동체의 탄력성 위기와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 변화 : 세월호 참사 사례의 안산시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제29권 2호, 133~179쪽.
- 레베카 솔닛(Rebecca Solnit, 2009). 『이 페허를 응시하라』(A Paradise Built in Hell), 정혜영, 정혜영 옮김(2012). 펜타그램.
- 양기근 (2010. 12). 「재난 이후의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 『공공행정연구』 제11권 2호, 69~87쪽.
- 오혜영 (2016. 8). 「재난에서의 집단 트라우마와 지역공동체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28권 3호, 943~969쪽.
- 임남희 (2017).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방안 연구』, 더좋은사회연구소.
- 한소정 (2017). 『세월호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더좋은사회연구소
- 힐링센터0416심과함 (2017). 『힐링센터0416 성과보고서, 1000일의 기록』
- Joe M. Schriver (1995).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 패러다임의 경쟁과 전환』(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 shifting paradigms in essential knowledge for social work practice).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옮김 (2013). 박영사.
- De Souza Briggs, X. (1997). "Social capital and the cities: Advice to change agents". National Civic Review. 86(2), 111-117.
- Fritz, C. E. (1996). "Disasters and Mental Health: Therapeutic Principles Drawn From Disaster Studies", University of Delaware Disaster Research Center.
- Kuhn, T. 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Chicago: Univ. of Chicago Pr.
-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thbor, G. M. (2008). *Effective Community Participation in Coastal Development*. Chicago: Lyceum Books
- Norris, F. H., Stevens, S. P., Pfefferbaum, B., Wyche, K. F., and Pfefferbaum, R. L.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1-2). 127-150.
- Schuetz, A. (1944). "The Stranger : An Essay in Soci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9(6). pp. 499-507.
- Schulman, M. D., & Anderson, C. (1999). "The dark side of the force: A case study of restructuring and social capital". Rural Sociology. 64(3). 351-372.
- Wallis, A. (1998).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building: Part two". National Civic Review, 87(4), 317-336.

박선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 ‘각자가 양손을 옆으로 쭉 뻗어본다.  
충분히 혼자 팔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선다.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을 주어 손을 조금 더 뻗어본다.  
그러면 누군가의 손이 잡힌다.’  
재난이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익명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도시에서 재난을 대하는 협동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자유롭고, 무리하지 않고, 재미있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땐 누군가의 손이  
꼭 잡히는 새로운 협동을 꿈꿔본다. ”

“재미있는 것을 하고, 들고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임이 많아지면 살고 있는 곳을 좋아하게 돼요. 그게 내가 만드는 ‘마을에서 놀기’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치유하게 하는 거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사단법인 씨즈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후원한 제1차 시민경제포럼 ‘지역 시민사회와 재난 복구 : 나와 이웃의 위기에 지역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연사로 참여한 우즈미 켄이치(慈憲)의 말이다.

우즈미 켄이치는 발생 당시 일본 전후 최악의 참사로 불리며 일본 전역을 충격으로 뒤덮은 1995년 고베(神戸) 대지진 이후 20년 이상 고베시(灘区)에서 마을을 통한 재난 복구를 해온 활동가다. 또 다른 연사로 세월호 이후 안산을 지켜온 힐링센터0416(쉼과힘) 임남희 사무국장, 경주와 포



시민경제포럼 ‘지역 시민사회와 재난 복구’ 진행 (출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항 지진 이후 지역에서 재난 대비 교육과 사후 대처 활동을 해온 경주아이  
클럽협 정미정 이사장을 모셨다.

기획하게 된 배경과 포럼 이후의 생각을 『생협평론』을 빌어 공유한다.

## 1. 고통의 표출은 세련되지 않다

지난 몇 년간 세월호 참사, 포항과 경주 지진 등으로 재난이 남의 일이 아  
니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도 전보다 커졌지만, 아직 자신의 일로 생각하  
는 시민은 적은 편이다. 나 역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 입사하기 전,  
NGO 활동가로 재난 현장을 방문했지만 재난을 가깝게 경험한 것은 대부  
분 해외에서의 일이었다.

대부분이 이미 장기 재건 단계에 들어간 지역이라, 겉으로 보아서는 흔  
히 상상하는 재난 직후의 참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6년 4월  
발생한 일본 쿠마모토 지진 현장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 당시 나는 일본  
재난 관련 NPO에서 일하고 있었다. 긴급 구조에서 대피소 운영 등 재건과  
복구의 첫 단계로 이제 막 들어서는 시점에 재난 현장을 둘러볼 기회가 생  
긴 것이다. 현장 운영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피해가 가장 큰 마시키 마을  
의 임시 피난소인 체육관은 어수선했고, (정부와 민간 모두가) 현장에서 최대  
의 통솔력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상사는 “현장을 봐줘야 하니 살짝 체육관 안을 둘러보고 오라”고 말했  
다. 들어선 체육관 안은 마치 닭장처럼 보였다. 이미 수용 인원을 넘어서  
사람이 뻥뻥하게 들어차 있었다. 화장실 문 바로 앞까지 사람이 머물 장소  
로 사용하기 위해 화장실 사용은 금지된 상태였다. 사람들이 얇은 깔 것  
위에 얽히고설킨 채 앉아 있었다. 여학생 옆자리에 가족으로 보이지 않는  
어른 남성이 자리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 한눈에 보

었다. 사람들의 눈빛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어렸고, 자신들의 생활공간에 (나를 포함한) 언론이나 외부 단체 사람들이 침범한 데 대한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마구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나 반려동물 동반 가구를 위해 체육관 외부에 텐트를 설치했는데, 제공 가능한 수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왜 저 사람은 텐트에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 나’에서부터 ‘따뜻한 물을 가져다 달라’, ‘마실 차도 없느냐’며 사소한 일로도 화를 내고 소리치는 사람이 나타나기 일쑤였다. 일행 중에는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 직원도 있었는데, 그에게 ‘일본어도 못하는 주제에 여기에 뭐 하러 왔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빠르게 대응하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피난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기다리는 피해자들, 그곳에서 둘 중 어느 것도 나는 만날 수 없었다. ‘재난 강국’이라는 일본에서도,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재난 직후의 마을에는 세련되고 성숙한 시민의식보다는 분노와 두려움만이 떠나지 않았다.

‘일본도 우리만큼 정부도, 사람들도 미흡하게 대처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정 지어 말하기엔 경험이 짧기도 하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정반대다.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화를 내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는 것,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비이성적이고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집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이웃이나 가족이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평정심을 잃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것이 재난에 대한 모든 이야기의 출발 지점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피해 당사자는 자신의 고통을 몰상식하고 미성숙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쏟아낼 수 있다. 사회는 이를 오롯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 아픔을 정갈하고 이성적인 언어, 세련된 방법으로 소화해내는 것은 사회의 몫이다.

## 2. 『BE KOBE』를 통해 만난 사람

쿠마모토에 짧게 들어갔다 나온 후 오히려 오래된 재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토록 불안해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마을과 자신의 삶을 되살려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동북대지진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너무 가까운 참사였다. 그래서 고베에 관한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고베 대지진<sup>1</sup>은 1997년 일본 고베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지진으로, 동북대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후 일본 최악의 지진으로 알려졌다.

‘BE KOBE’는 고베 대지진 20주년을 맞아 고베시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의 이름이다. 고베시는 커다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던 고베 시민의 공헌을 기억하려 고베항에 ‘BE KOBE’라고 쓴 커다란 기념물을 만들고 재난을 기억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고베시는 ‘BE KOBE’가 “다른 사람을 위해 힘을 다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그 마음으로 20년간 고베를 지켜온 고베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슬로건이 밝히고 있듯이,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

책 발간 또한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BE KOBE』는 20년간 고베를 지켜온 시민 75명(영어판 수록 인터뷰 수는 일본어판보다 적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집이다. 책에는 사회적 기업가, 시민단체 활동가도 소개되어 있지만, 평범한 엄마, 빵집 주인, 1995년 출생한 시민 등 오롯이 ‘지역을 지켜온 시민’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단한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일에 뛰어들지 않았어도, 재난으로 황폐화된 고베시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려온 사람들을 재건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냈다는 것을 공헌으로 보는 관점이 신선했다.

고베 마을 활동가 우즈미 켄이치는 그 중에서도 ‘꼭 만나고 싶다’는 생

1 효고현 남부 지진, 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도 알려졌으며 1995년 1월 17일 화요일 오전 5시 46분경 일어났다. 6,400여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만 4만 3,000여 명에 이른다.



고베 마을활동가, 우즈미 켄이치 (출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각이 드는 사람이었다. 여러모로 신선했다. 대학 시절부터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지만, ‘대의’와 ‘가치’란 말에 조금씩 지쳐 ‘내 삶에도 지속가능하고 사회에도 조금은 좋은 일’을 꿈꾸기 시작한 내게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우즈미 켄이치는 고베시 나다구 출신이지만 지진 발생 당시에는 도쿄에 살고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나다구에 살고 있었는데, 나다구가 피해가 큰 지역이라는 소식만 들리고 가족과 연락이 잘 단지 않자 부랴부랴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은 많이 무너져 있었지만 다행히 가족들 모두 무사했다. 알고 보니 가족이 모두 무사했던 건 이웃들 덕분이었다. 자위대나 소방 구조 인력이 들어왔지만 피해 범위가 너무 넓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저쪽에 누가 살고, 그 집엔 몇 명이 있고, 그쪽으로 가면 사람이 없다’는 등 이웃들의 위치와 소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이

다. 피해 주민을 직접 구조하거나 주변 위험물을 치우는 데 참여한 것은 물론이다. 긴급 구조 상황이 며칠간 지속되던 중에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런데 재건과 복구를 논의할 시기가 되자 보상 범위와 방법, 순서를 두고 사람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우즈미 켄이치는 그토록 사이 좋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안타까워 지자체 주도로 만들어진 대화나 조정 기구에 참여했다. 협의체, 대화 모임, 마을 만들기가 계속됐지만, 서로를 향해 ‘한쪽 편만 든다’, ‘돈 받은 것 아니냐’는 심한 말들이 오가는 등 갈등과 반목이 커졌다. 우즈미 켄이치는 ‘당시 정말 열심이었던 선배 활동가가 갑자기 몸이 나빠져 사망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주 건강했던 사람인데 분명히 활동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우즈미 켄이치는 그때부터 ‘커뮤니티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지 알리자’는 취지의 가벼운 장난들이었다. 이를테면 마을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낮은 굴다리에 ‘림보 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림보 대회를 열기도 하고, 마을의 갖가지 추억의 장소를 돌아보는 ‘마을 투어’를 계획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을 좋아하는 마음을 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시내버스에 갑자기 올라타 게릴라 음악 공연을 진행하는 등 단순히 마을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한 일도 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장난이냐고 혼날 법도 하지만 사실은 재건 과정에 지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마을 활동을 시작한 데는 무가지 발행이 계기가 되었다. 고베시 nada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나다 마을 주의’라는 뜻의 『Naddism』(나다주의)이라는 잡지를 발행한 것이다. ‘마을의 좋은 점을 알리자’라는 활동의 첫 취지를 살려 마을 곳곳에 아직 남아 있는 의미 있는 장소의 사진과 그에 얽힌 추억을 담아 잡지를 발행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다

소 장난처럼 보이지만, 우즈미 켄이치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마을에서 활동하며 타 지자체에서도 인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 3.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에서 놀기'로

#### (1) 나다구 마을 마라톤

일본은 마라톤 애호가들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다. 고베시에도 '고베 마라톤'이 있는데, 이 마라톤은 나다구를 통과하지 않는다. 이를 안타까워한 우즈미 켄이치가 고베 마라톤을 패러디해 나다구 마라톤을 만들었다. 특징으로는 첫째,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걷는 길로 뚫다. (공식 신고



나다구 마을 마라톤, 산중턱 카페 (출처: 우즈미 켄이치 제공)

된 마라톤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타임 키핑은 스스로 한다. 셋째, 곳곳에 물과 간단한 디저트는 물론 술까지 구비된 ‘에이드 바’가 있다. (에이드 바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힘들면 그만하지 그래?’) 넷째, 코스는 나다구 곳곳을 둘러 볼 수 있도록 공원, 하천 등을 지나도록 설계되었다. 지금은 외국인도 참여하는 1,000명 이상의 규모로 확장되어 나다구의 명물이 되었다.

## (2) 나다구 주민이 꿈꾸는 재건 이후 마을 상상도

마을 주민들과 모여 실현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재건 이후의 마을을 상상했다. 마을 축제를 하거나 케이블카를 설치해 마을 아래까지 편하게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재미있는 상상이 나왔다. 이 상상도가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밝은 마음으로 미래를 상



재건 이후 마을 상상도  
(출처: 우즈미 캔이치 제공)

상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고, 마을버스 운행 등 다른 형식이지만 실제 현실화한 사례도 있다.

### (3) 나다구 마을버스



(출처: 우즈미 켄이치 제공)

나다구 마을버스는 앞서 언급한 마을 주민 상상을 현실화한 것이다. 나다구는 산과 언덕이 많은 동네라 고령의 시민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블카가 마을 아래까지 다녔으면 하는 바람도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요

구를 무리한 것으로 단정 짓지 않고, 주민들과 우즈미 켄이치는 기부금을 모았다. 언덕과 평지를 운영하는 동네 마을버스는 지금도 운행 중이다.

### (4) 무가지 『Naddism』

위에서 잠깐 언급한 무가지 『Naddism』은 아직까지 발행 중이다. 종이 잡지에서 온라인 블로그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블로그를 통해 나다구 곳곳의 맛집과 이벤트 소식을 알리고 있다.

### (5) 나다 구역 도시락 판매

나다구에서 나는 토산품으로만 이루어진 도시락을 만들어 역에서 판매했다. 나다구에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활동인데, 준비한 물량이 금세 동나며 대히트를 기록했다고 한다.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고베시나 나다구에서 우즈미 켄이치의 활동을 괴짜의 활동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지역 재건 차원의 유의미한 활동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마을이 만든다고 만들어지느냐’, ‘마을 만들기라는 말이 싫어 마을에서 놀기’라고 하는 그를 나다구에서는 오히려 ‘나다구의 좋은 점 100가지 찾기’ 등 유사한 활동을 만들어 위원으로 위촉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가 말하는 자신의 활동 철학을 살펴보자.

### (1) 드나들이 자유로울 것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애초에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작은 이벤트를 끊임없이 열고, ‘하겠다’는 공표만 하고 그 사이사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나다구의 명물인 마야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마야산 꼭대기에서 폴리마켓’을 열고 폴리마켓과 요가,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별도의 신청 없이 판을 깔고 시작하면 그만이었다. 마을 마라톤을 진행할 때도 곳곳에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에이드 바는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직접 ‘열고 싶으면 열면 된다’는 식이다.

### (2) 만드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무리하지 말 것

첫 번째 철학에 이어 누구도 무리하지 않고, 힘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즐거운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무리하면 오래할 수 없거니와 오히려 재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재건 과정에서 그가 얻은 교훈이다. 재해 후 일본 전역에서는 고베 지역을 주목하고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는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빨리 재건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고 말한다. 그러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 쉬어 가도 된다’는 것이다.

### (3)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만들 것

가장 흥미로웠다. 우즈미 켄이치는 이 모든 과정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마라톤의 시작, 시내버스 운행 모두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운영이 복잡해진다.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마을이고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정부 지원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 4. 고베와 안산, 경주를 잇다

대지진을 겪은 고베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지진재난을 겪은 경주를 이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물음에서 이번 포럼은 시작되었다. 세월호는 너무나 참담한 인재<sup>災</sup>였다. 경주 지진은 고베 대지진만큼의 피해는 아니었지만 우리 사회엔 큰 재난이었다. 양상과 규모는 다르지만 세 곳 모두 지역사회를 뿌리째 흔들어놓은 큰 재난을 겪었다. 서로 다른 상황을 억지로 엮어내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섰지만, ‘재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는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난 이후의 안산과 경주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고베와 안산, 경주의 재난 이후 나타난 ‘삶을 위한 활동’은 서로 닮아 있었다. 포럼 당일 안산 힐링센터0416쉼과힘 임남희 사무국장, 경주아이콤플생협 정미정 이사장은 서로의 활동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안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고잔동은 정말 아름다운 동네여서 한번 이사 오면 다들 떠나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걸 살려보려 했죠.” 세월호의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생명들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단원소생길’을 조성했다는 임남희 사무국장은 이와 같이 말했다. 단원소생길과 같은 취지로 유가족 합창단을 조직하고, 뜨개 공방을 열고, 세

월호 희생 학생 양온유 양의 이름을 딴 ‘온유의 딸’도 조성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은 유가족과 안산 주민들 사이에 만남의 장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초기 시작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양온유 양이 다니던 교회 장소를 빌려 시작했다. 점차 그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올해 경기도로부터 2억 원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경주아이쿱생협은 지진 이후, 재난 상황에 기여하고자 하는 심리상담사들의 모임 ‘이지스’, 국제개발 NGO ‘더프라이스’와 함께 재난 후 트라우마 치료와 함께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학습했다. 조합원 대부분이 이전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이어서 호응이 컸다. 일본 도쿄도에서 발간한 『도쿄방재』를 번역해 지역 주민들과 나누기도 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하자 교육을 받은 조합원들이 포항으로 달려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직 우리 사회의 재난 담론은 그 지층이 깊지 않아서, 법제도를 정비하기에도 벅찬 수준이다. 법제도가 위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정비된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이끌고 또 제도가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을 살피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마을과 사람의 일로 남는다. 단순히 감정적이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다. 유엔에서도 재난의 핵심 대응 주제로 커뮤니티에 집중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회복력(resilience)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커뮤니티 재난 회복력’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지만, 실제 재난을 겪은 지역에서는 마을이 치유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고 있었다.

## 5. 재난을 목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포럼을 기획하면서 스스로 던진 질문은 ‘재난을 목격하고,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종합토론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이 직접 발언을 했지만, 포럼의 발제자들은 피해 당

사자 또는 재난 상황에 개입한 사람들이었다. 우즈미 켄이치의 경우도 고베 나다구 출신이긴 하지만 다른 이들에 비해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어서 비교적 빨리 재난 복구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일본의 고베, 한국의 안산과 경주, 세 곳의 사례를 통해 재난을 겪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꼽아보았다.

### (1) 마을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다

우즈미 켄이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럼 사전에 몇 가지 답을 얻기도 했다. 우즈미 켄이치의 마을 활동은 일본 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TV에 출연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기도 한다. 아래는 한 강연회에서 있었던 젊은 활동가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질문 :** 마을 활동이 어려워 고민이 많다. 뭘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대하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 :** 비결은 ‘버티기’이다. 나도 그랬다. 마을 사람들이 초기에는 ‘또 누가 와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냐’하는 의심의 눈길로 볼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작은 일이라도 해나가면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된다. 그게 쌓이면 이상한 놈들이 ‘씩 괜찮은 놈들’로 바뀌는 시기가 온다. 그 시기가 되면, 내용도 보지 않고 ‘이상한 거 아냐’ 하던 사람들이 ‘재들이 하면 괜찮아’, ‘좋은 친구들이니까 재들이 하는 일은 도와줘야지’ 하게 된다. 사람을 보고 모인다. 그 자리를 끈질기게 지키는 것밖에 비법이 없다.

무대가 어디든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좋은 마음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기 위해 활동하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자신들을 위한 일인데도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

고 개인의 이득만 따진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재난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누구를 믿고 함부로 손을 잡겠는가?

우즈미 켄이치가 지역 출신이면서도 개인으로 활동한 탓에 ‘버티기’ 작전으로 마을의 신뢰를 얻었다면, 안산과 경주는 이전부터 마을에서 활동해왔던 신뢰받는 조직과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례다. 안산의 힐링센터0416 쉽과힘은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의 부모가 소속되어 있었으며,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와 손을 잡았다. 경주아이쿱생협은 조합원들과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기존에 쌓인 신뢰 관계를 십분 활용했다.

## (2)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우즈미 켄이치가 보여준 재난 이후 시내버스에서의 게릴라 음악 공연이나 림보 대회 같은 ‘장난’, 세월호 유가족 합창단 조직 등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가족과 이웃이 떠난 마을에서 즐거운 활동을 하고, 노래와 춤을 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모두 ‘재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실제 피해 가족과 이웃들이 원하는 것을 실천했다.

힐링센터0416쉽과힘의 임남희 사무국장은 포럼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손잡고 우는 것만으로는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 서로가 또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고 만날 매개가 필요했다”고 말한다. 한편, 마음껏 소리칠 장소가 필요했던 유가족들의 막힌 가슴을 조금이나마 풀기에 합창단이라는 형식은 안성맞춤이었다. 경주아이쿱생협의 재난 대응 교육에는 조합원의 요청으로 지진 대피뿐 아니라 인접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했을 경우에 대비한 교육도 포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세 경우 모두 개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였다.

### (3) 활동을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사람이 한다

때로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더 많은 돈을 끌어와 활동의 규모만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다. 논의된 세 가지 사례 모두 조직의 비대화보다 활동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아예 조직이 없거나(고베), 소규모 조직이 다른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활동하거나(안산), 기존 조직을 그대로 활용했다(경주).

경주의 경우, 가족들의 안전에 민감한 생협 어머니 조합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내 가족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기에 활동에 적극적인 수밖에 없었다. 힐링센터0416쉽과힘의 경우에는 연세대 상담코칭지원센터,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등과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근 활동가 3명의 작은 조직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다. 고베의 우츠미 켄이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재미있는 활동을 발굴하고, 참여는 철저한 자율에 맡겼다.

## 6. 한국에서 우츠미 켄이치 방식은 가능할까

우츠미 켄이치의 활동이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그의 독특한 철학은 물론 그러한 활동을 통해 마을 활동가로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베 지역의 생협들도 재난 복구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힘을 모아 활동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동네에서 재미있게 노는 것이 목적이고, 제도나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큰 단체와 협력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내가 나와 이웃을 돕고 행복하게 지내겠다’는 것은 일본의 다양한 마을 만들기, 시골에서 살아가기의 성공 사례에서 확인되는 계기 중 하나다. 많은 성공 사례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지만 국내 시민단체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활동을 정치화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정치 세력화를 통해 의제를 만들고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한국 시민·사회운동에서 이러한 ‘탈정치’는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히 생각해볼 지점은 있다. 특히, 시민사회나 사회적경제 영역의 젊은 활동가 이탈이 눈에 띄는 요즘, ‘사회적인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우즈미 켄이치의 방식은 중요하다.

‘즐거운 일을 한다’ ‘무리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 다시 하고 싶어지면 그때 다시 함께하면 된다’ 어느 것도 우리의 시민사회에서는 쉽게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가 전업 활동가가 아니고 별도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과 ‘책임감’이 미덕인 한국 사회에서는,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더라도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선 질문을 다시 풀어볼 수 있다. 전업 활동가는 왜 이렇게 활동하면 안 될까? 전업 활동가가 ‘즐거운 일을 자유롭게 열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오고 싶을 때 오는’ 자유로운 플랫폼에서 시민을 만날 수는 없을까? 민관 협치나 마을 만들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시민을 만나기 어렵다’는 말이 종종 들려온다. 새로운 판을 벌여도 이미 정치화된 사람들이나(이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혹은 ‘판이 열리는 시간대’에 참여 가능한 사람들만 계속 온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더욱 심하다. 치솟는 집값에 떠밀려 몇 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하는 사회에서 ‘내 마을’에 애정을 갖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주성이 없는 마을 안에서 거주민들 간의 협동은 철저히 개인이 필요한 만큼, 익명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영역에서만 받아들여지기 쉽다. 물론, 공동육아나 교육 등 다른 분야의 공동체 만들기라면 당사자들의 참여가 좀 더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겠지만, 누구 하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재난이 주제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민사회에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보

호반을 수 있는 가장 느슨하고 험거우면서도 촘촘한 보호막이 필요하다.

## 7. 다양한 상상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 고베와 안산, 경주를 이어보며 떠오르는 상상들을 나열해본다. 우즈미 켄이치의 조연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 (1) 유연한 ‘활동’ 방식들

활동가들이 프로젝트와 예산, 시민사회 내의 위계질서에 사로잡히면 유연한 활동이 불가능하고, 무리하면 오래 버틸 수도 없다. 예산을 딸 수 있는 사업, 선배 활동가가 ‘오케이’ 할 것 같은 사업에만 묶어서는 안 된다. 또, 모두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기계적으로만 활동해서는 시민들을 폭넓게 만날 수 없다. 시민사회에도 파격적인 활동 방식의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직업 활동가 안에서도 우즈미 켄이치와 같이 자유로운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활동가가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원하는 분야의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 수 있는 장을 열어보고, 새로운 실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활동가가 사회 혁신을 이끄는 개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판을 열자는 것이다.

특히 최근 두드러지는 젊은 활동가의 이탈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조직 분위기 혁신은 꼭 필요하다. 즐겁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안의 1원, 10원 단위를 맞추기 위해 만나는 사람보다 영수증을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하고, 상사의 권위적인 태도에 억눌린 활동가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누구도 무리하지 않는 판’을 만들 수 있을 리 만무하다.

## (2) 그리고 새로운 '협동'의 관계들

이 부분에선 생협이 큰 가능성을 가진다고 본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군대나 소방 등 국가의 대비 시스템이 가장 먼저 발동한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로 이미 잘 엮어진 민간 네트워크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전에 민감한 생협 조합원들이 재난 교육을 먼저 받고, 지역사회 재난 대응의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떨까.

지역 사회복지단체, 대학과 협력한 안산의 힐링센터0416쉽과힘 역시 매우 효과적인 협업 사례다. 심리 지원이 필요한 유가족들에게 심리 전문가와 지역사회를 잘 아는 복지사들이 함께 만나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엮어둘 필요가 있다.

재난 대비 방법 중 많이 쓰이는 것이 '위험 지도 만들기'이다. 우리 마을의 위험 요소를 살펴보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도로 만들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에 누가 살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장애인, 노약자 가구를 살펴보고, 대피로의 불편함을 확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첫째, 위험 제거를 위해 마을에서 무엇을 할지, 둘째, 정부나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요구할지, 셋째, 유사시 어떻게 대처할지를 찾는 것이다. 단순히 위험 요소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 발생 시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찾기' 방식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동네 슈퍼가 있으니 식량은 슈퍼에서 구하고, 심리 상담사는 어느 곳에 살고 있으니 그곳을 찾으면 된다는 식이다. 고베시처럼, '이 집에 누가 사는데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까지 가능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더욱 좋다. 그러나 익명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도시에서는 유사시 작동 가능한 네트워크를 확인해두는 정도로도 큰 의미가 있다.

재난이 닥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재난을 잘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

감이 확산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민성, 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포럼에서 다뤄진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며 촘촘한 공동체가 버거운 '젊은 것들' 중의 한 명으로 재난 회복력 공동체를 위한 상상을 해본다.

‘각자가 양손을 옆으로 쭉 뻗어본다. 충분히 혼자 팔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선다.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을 주어 손을 조금 더 뻗어본다. 그러면 누군가의 손이 잡힌다.’ 재난이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익명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도시에서 재난을 대하는 협동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자유롭게, 무리하지 않고, 재미있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땐 누군가의 손이 꼭 잡히는 새로운 협동을 꿈꿔본다.

김현대  
〈한겨레〉 기자

## 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

“ 이주민과 난민 문제 해결은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정치적 격랑이 몰아친다.  
그에 맞선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난민과 이민자들의 생계와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협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 각지의  
협동조합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가? 각국 협동조합들은  
그들 정부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협동조합운동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난민 문제이다.

최근 빈발하는 IS 테러로 심화된 난민 위기는 우리에게 어쩌면

먼 이야기로 여겨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정책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그동안 약 2만 3,00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최근 몇 년간은 매해 3,000~5,000명이 우리 사회에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살아갈 나라도 안전지대도 잃어버린 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공동체’이다.

난민은 보호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자 사회안전망의 공유를 통해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나와 같은 인간이다. 안전사회를 찾아 떠난 난민들에게

호혜의 가치를 중심에 둔 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안전을 위해 새로운 사회를 찾은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만들고 있는 해외의 다양한 협동조합 사례를 살펴보자.

(편집자 주)

난민과 이민 문제가 국제사회에 쓰나미를 몰고 오고 있다. 난민을 토해내는 나라는 물론이고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는 나라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격랑에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가벗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유럽 각국에서 극우 세력이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럴 때 협동조합은 난민과 이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총회에서도 난민이란 키워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난민 사태와 이민자 유입에 대처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이라는 제목의 세션을 열어, 각국 협동조합 지도자들이 서로의 생각과 실질적인 경험을 나누었다. 이들은 “난민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곧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지멜 에짐Simel Esim 협동조합국장은 “2016년에 ‘협동



2017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총회 모습.  
 발가벗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를 가져뉴스로 조롱하고 있다.



난민 세션에서 지젤 에짐 ILO 협동조합국장이 발표하는 모습.

출처 : 말레이시아 협동조합 앙카사(ANGKASA)

조합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구소사를 했다"면서 "협동조합과 난민 간의 파트너십이 절실하다는 배움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이 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회적 돌봄과 주거 같은 서비스와 상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터키협동조합연맹의 후세인 폴라트Huseyin Polat 선임자문역은 "지역사회와 난민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협동조합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독일 주택협동조합 바우버라인 할레&로이나Bauverein Halle & Leuna의 임원인 쿠도 슈바르첸달Guido Schwarzendahl은 "난민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열린 이웃으로 통합하는 것이 궁극적 과제"라고 말했다. 세션 진행을 맡은 스웨덴의 최대 주택협동조합 HBS의 얀 안테르스라고Jan Anders Lago 이사장은 "난민과 이민이 없었다면 스웨덴의 경제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의 긴급한 의식주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자립을 이끄는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 사례들도 소개됐다. 이탈리아협동조합총연합AGCI의 카를로 스카르차넬라Carlo Scarzanella 부회장은 여러 지역에서 모범적인 난민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아우실리움Auxilium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례를 자랑스럽게 전했다. 터키의 폴라트 선임자문역은 시리아 난민촌 여성들이 세운 앙카ANKA 협동조합, 난민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지원하는 유바 연합YUVA Association이라는 비영리단체 사례를 발표했다. 단순히 주거 지원으로 시작했다가, '주택 공급 그 이상'의 역할을 자임하게 된 독일의 주택협동조합 사례도 공유됐다. 팔레스타인 경제사회발전센터의 아크람 알 타헤르Akram Al Taher 사무총장은 여성들이 식품가공사업으로 시작해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까지 설립한 요르단 중부 계곡의 알 지프틀리크 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했다.

쿠알라룸푸르의 ICA 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난민 세션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통계부터 살펴보자. 전 세계 이민자가 2억 3,000만 명이고, 그중 절대다수인 1억 5,000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나라를 떠난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의 57%가 남성인데, 최근 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타의로 자기 나라를 떠난 이민자가 6,560만 명이고, 난민이 2,250만 명에 이른다. 국적을 잃은 사람이 1,000만 명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정착한 난민은 18만 9,000명으로 20만 명에도 못 미친다. 난민 발생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시리아 순서이다.



지멜 에짐 (Simel Esim)

난민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데 통상 15~17년이 걸린다.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막연히 본국 귀환을 기다릴 수만도 없다. 난민들의 일자리 수요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공장, 건설 현장, 가사노동 같은 비공식 부문으로 주로 흡수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데,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등 기본권과 노동권 침해가 공공연히 벌어진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린다. 문제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 보니 법적으로 호소하기도, 정부 배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절실하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145개국이고, 그중 난민한테 일할 권리를 인정한 나라는 75개국에 불과하다. 많은 나라에서 난민이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ILO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두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나는, 이

주노동자가 본국을 떠나지 않도록 저개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ILO는 2016년 유엔난민기구<sup>UNHCR</sup>와 특별히 난민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6월에는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면서 ‘난민 조항’을 포함시켰다.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레바논에서는 ‘난민 일자리 시범사업’도 벌이고 있다.

ILO는 ‘협동조합과 난민’ 연구를 통해, 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협동조합이 잘해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발짝 더 나가면, 협동조합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및 NGO와의 난민 지원 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의약품, 일자리, 언어, 교육, 금융과 법률, 돌봄 서비스 등 난민과 이민자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무수한 사례가 있다. 난민들을 위한 사회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주거 지원에 나서는 독일의 협동조합,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캐나다의 이민 1세대 생산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은 물론, 이탈리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협동조합 사업체를 설립한 사례도 등장했다.

난민 지원을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긴요하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sup>市</sup> 정부와 유엔이 주택협동조합의 난민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난민들의 사회 통합을 이끄는, 협동조합의 역량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ILO와 협동조합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카를로 스카르차넬라<sup>Carlo Scarzanella</sup>, 이탈리아협동조합총연합<sup>AGCI</sup> 부회장**

엄청나게 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다. 끔찍하다, 비상이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적인 숫자 하나를 들어보

자. 유럽으로 건너오려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 2016년 한 해에만 5,022명이었다! 지난해 9월 국제해상기구(IMO)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월 이후 2017년 6월까지 바다를 건너다가 죽거나 실종당한 난민 숫자가 2만 5,000명에 이르렀고, 이중 절반이 지중해에서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아프리카·중동과 가까운 유럽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라들이 인도적 책임을 많이 짊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차원의 난민 지원은 지극히 부족하다. 국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탈리아에도 2017년 1~10월 사이에 100만 명의 난민이 들어왔다.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로, 나라별로 보면 나이지리아 21%, 에리트레아 12%, 기니와 감비아, 아이보리코스트 각 7%, 세네갈 6%, 수단과 말리 5%이다. 이들 아프리카 난민의 70% 가량이 시칠리아 섬으로 들어온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이들 중 공식 난민촌에 수용된 사람은 5%에 불과하다. 14%는 보조시설에서, 22%는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나머지 59%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아동 난민의 숫자도 급증해, 2016년에 2만 8,000명에 이르렀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극심한 쇼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도 해야 한다. 유럽의 다른 나라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탈리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탈리아에서는 협동조합이 난민의 삶을 돌보고 정착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탈리아에는 1만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3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케이터



카를로 스카르차넬라(Carlo Scarzarella)

링협동조합이 난민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가 하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들도 있다. 다양한 협동조합이 맞춤형 돌봄과 지원에 나서면서 난민의 사회 통합을 이끄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난민센터 운영은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모범 사례)’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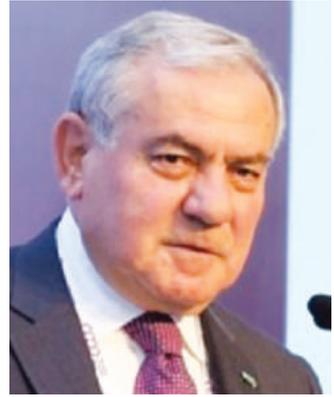
그중에서도, 아우실리움(Auxilium)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난민센터 운영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유엔에서도 2007년 이후 아우실리움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는 난민센터를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할 ‘모범 센터’로 꼽았다. 숙소를 비롯한 시설이 좋기도 하지만, 아우실리움의 가장 큰 자부심은 난민들이 낯선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센터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돌봄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어를 가르쳐주고, 난민들과 함께 축구나 농구를 즐기거나 연극 워크숍도 진행한다. 아우실리움 조합원들은 난민들이 센터에서 지낸 순간순간의 경험이 그들이 새로운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만들고자 노력한다.

#### 후세인 플라트(Huseyin Polat), 터키협동조합연맹 선임자문역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누가 난민들을 배려하는가?’ ‘난민들을 지원하는 부담을 누가 짊어지는가?’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로컬(지역사회)이다.

시리아에서 터키로 넘어온 난민이 340만 명에 이른다. 이중 절반이 청소년과 아이들이다. 23개 난민촌에 수용된 인원은 24만 6,700명으로 전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터키 정부는 2011년 이후 난민 지원에 250억 달러를 지출했다. 유럽연합은 29억 유로를 책정해 실제 8억 1,000만 유로를

집행했다. 그동안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터키와 유럽연합 간의 파트너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유럽연합의 입장은 이렇다. “우리는 난민을 지지한다. 다만, 유럽연합 바깥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가까이 재정 지원도 하겠다.” 터키는 이렇게 맞선다. “우리도 난민을 지지한다. 허나, 유럽연합에서 600억 유로를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민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을 막지 않겠다.” 양쪽의 입장을 접한 난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터키를 다 지지한다. 하지만, 거짓 말하지 말라.” 난민들한테는 살 곳이 어디든(터키든 유럽이든) 상관없다. 유럽연합과 터키는 끝도 없고 답도 없는 협상을 오늘도 진행하고 있다.



후세인 폴라트(Huseyin Polat)

캠프 바깥의 난민들은 낯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시적인’ 동거라고 생각했던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제 이런 상황이 ‘무기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됐다. 난민들이 비공식 부문의 저임금 노동자로 내몰리면서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난민들한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로 인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난민들은 자유라는 것이 참 얻기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긍정적 신호도 있다. 품질 좋은 전통 수공예품과 양탄자를 생산하는 앙카협동조합Anka Cooperative Society이 좋은 사례다. 시리아 출신 여성 난민들이 세운 앙카는 조합원들한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공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카펫과 양탄자 짜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2020년까지 2만 명의 여성 난민들한테 기술을 가르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난민들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길을 찾는 데 NGO가 협동조

합의 동반자 구실을 한다. 동지라는 뜻의 NGO인 유바<sup>YUVA</sup>가 모범 사례로 꼽힌다. 키리칸과 니지프 2개 지역에서 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면서, 심리 상담과 언어·컴퓨터 교육, 다양한 직업 훈련 및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난민 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 참여자는 여성이 73%로 난민 창업가도 배출하고 있다. 시리아 출신 74%, 터키 출신은 26%이다. 터키에서는 지난 6년 동안 6,000여 개의 난민 소기업이 생겨났다. 하지만 대다수가 비공식 부문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사회와 난민들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자임하기를 기대한다. 이미 지역사회의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들은 교육받은 난민들을 능동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난민들이 노동자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에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협동조합들도 난민 고용을 늘릴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과 건축협동조합은 계절에 따라 난민을 고용할 수 있다. 난민들이 생산한 수공예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협동조합들이 전국적으로 협동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리아 사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의 귀국에 대비해야 한다. 터키의 협동조합들은 난민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현물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7~8년 난민들과 함께 지낸 우리 협동조합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귀도 슈바르첸달 Guido Schwarzendahl, 독일 바우버라인 주택협동조합 임원**

독일에는 2015년 이후 2년 동안 150만 명의 난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터키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독일이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이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당연히 이런 일을 치러본 경험이 없었다.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난민들의 주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다. 다행히, 옛 동독 지역의 주택협동조합들이 넉넉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도시 지역의 주택 사정은 그보다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난민 주거 문제는 도시 지역의 주택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귀도 슈바르첸달(Guido Schwarzendahl)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옛 동독지역에는 빈집이 많다. 난민들한테 주거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곳의 빈집이 줄어들 수 있을까? 대답은 ‘결코 아니오’이다. 옛 동독지역에 빈집이 많이 생겨난 원인이 무엇인가? 높은 실업률 때문이다. 난민들한테 집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줄 수는 없다. 난민들은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결국 대도시로 떠나게 된다.

내가 속한 바우버라인(Bauverein Halle & Leuna) 주택협동조합의 경우, 세입자인 조합원의 1.5%가 난민이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들뿐 아니라 제한적인 거주권을 부여받은 난민들한테도 주거를 제공한다. 다른 세입자와 차별 없이 거주하며, 똑같은 조합원 지위를 누린다. 주<sup>州</sup> 정부에서는 월세와 조합비를 지원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난민들이 새로운 이웃들과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낯선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다. 바우버라인은 주택 부문에서만 활동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회 통합 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갈 능력이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택 그 이상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기존 주민들과 난민들 사이에 다리를 놓자는 뜻으로 ‘가교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열린 이웃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 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3명이 풀타임으로 참여하고, 이웃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일을 거든다. 난민들한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한다.

**아크람 알 타헤르 Akram Al Taher, 팔레스타인 경제사회발전센터 사무총장**

중부 요르단계곡 알 지프트리크 Al Jiftlik란 마을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곳 주민들은 1967년 이스라엘의 강제 점령으로 쫓겨났다. 당시 600채의 가옥은 모두 파괴됐으며, 6,000명의 주민 중 절반이 다시 돌아와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경제사회발전센터가 2005년부터 이곳 여성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거들며, 2006년에 식품가공사업을 하는 알 지프트리크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현재 16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이 조합원이고, 총 출자금은 1만 2,000달러이다.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목적이다. 협동조합이 없었다면, 이들은 인접한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착취당하면서 일했을 것이다.

경제적·사회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은 농산물을 마을에서 구입한다. 그 덕분에 절반의 여성 조합원들은 농산물을 팔 수 있게 됐다. 남성 조합원들은 농산물을 협동조합 가공센터나 시장으로 운송하는 일을 얻게 됐다. 2013년에 조합원들은 1인당 100달러의 배당금도 받았다. 조합원들은 전기를 도입하고 병원을 유치하자는 등의 캠페인을 이끄는가 하면, 근처 이스라엘 정착촌에 맞서 마을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 움 아헤드의 말을 전한다. “우리는 엄청난 일을 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는 이스라엘 정착촌으로 건너가 일하는 여성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 마을의 남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발표가 끝나자, 지멜 에집 ILO 국장이 안타까운 듯 “유럽

의 소매유통 협동조합들과 협력을 시도해보라”는 ‘마케팅 자문’을 즉석에서 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협동조합은 공정무역 국제연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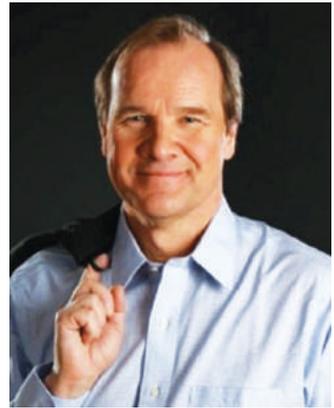
**얀 안데르스 라고 Jan Anders Lago, 스웨덴 주택협동조합 HBS 이사장**

스웨덴에는 100년 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많은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 내가 HBS의 이사장이 되기 전에 살았던 마을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그중 대다수가 중동계이다. 스웨덴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인데 외국인이 이미 20%에 이른다.

이주민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민자 없는 미국을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외국인 유입이 없었다면 스웨덴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을 것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과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주민의 유입은 절실하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출산율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고령화가 극심하다.

지난해 가족과 함께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식당에서 아들이 직원들의 국적을 물어보았다. 스물다섯 명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영국 국적자는 단 한 명이었다. 스물네 명이 외국인이었다. 이게 눈감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주민 없는 영국은 생존할 수조차 없다.

이주민과 난민 문제 해결은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정치적 격랑이 몰아친다. 그에 맞선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주민이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얀 안데르스 라고(Jan Anders Lago)

런데 이주민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특히, 난민은 단시간에 큰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다. 난민이 많이 들어오는 터키와 이탈리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몫이다. 난민과 이민자들의 생계와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협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 각지의 협동조합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가? 각국 협동조합들은 그들 정부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협동조합운동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 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는 우리를 둘러싼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사회적경제 전 영역은  
'위기사회'라는 관점에서 사회를 인식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올리히 벡이 요청한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주체적 노력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방법론을 통해  
전면화되기를 바라본다. ”

## 위험사회 vs. 산업사회

공장 굴뚝이 시커먼 연기를 뿜어 올리는 광경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감흥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 한쪽은 한국 사회가 선진적 기술 시스템을 갖춰 대량생산을 이뤄낸 징표를 보는 듯 뿌듯해하고, 다른 한쪽은 미세먼지 등 호흡기 질환, 기후변화를 유발하지 않을까 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앞선 반응이 발전과 성장을 생각하는 ‘산업사회’의 관점이라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위험사회(risk society)’의 관점이다. 같은 시대, 같은 사회를 살아가지만 현실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사회를 생각해볼 수 있다.

‘위험사회’라는 개념은 1986년 출간되었고 1997년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된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저서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를 통해서 알려졌다. 1986년 소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소환되어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서 ‘위험(risk)’이라는 용어는 재해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예견이나 예측을 함께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불확정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과 그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활동을 말하며, 영어 발음 그대로 ‘리스크’라 표현하기도 한다. 위험이 발생하는 시기와 위험을 예상하는 시기가 다르고, 산술적으로 계산해 ‘비용’으로 표현하려는 이 같은 특성은 보험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인가를 기업 입장에서 계산하는 산업 사회의 제도들은 위험을 경제적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의 실재적 차원, 즉 발생 가능성과 파괴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 울리히 벡의 진단이다. 위험을 축소하려는 사회 제도와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개인이 대립하게 된다. 개인들의 ‘위험인식’이 제도적으로 과

소평가된 '위험인식'과 대립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사회가 변영하면서 초래한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현대 산업사회의 '제도화된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위험'을 개인 스스로 인지하고 해석하고 처리하는 시대가 오면서 개인은 선택해야 하는 불안감에 처하고, 저항의 형태 역시 조직적이기보다는 개인화되고 다양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옥시싹싹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에 포스트잇으로 추모한다든가, 일자리 위협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등이 그것이다.

거기에 더해 새로운 '위험'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파괴력이 크고 무차별적인 재앙은 원자Atom, 생물학Biology, 화학Chemistry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과학이 스스로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험을 만들어낸 것이다. 과학이 '지식'과 '무지'를 동시에 생산한 셈이다. 무차별적인 이들 위험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미래세대나 주변부의 빈곤국가에게 위험을 떠넘겨왔다. 금융위기를 불러온 건 은행의 관리자였는데, 국민 세금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납세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겼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래세대로 비용을 떠넘기기만은 어려운 형편이다. 기후변화가 일어나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면서 이들이 다시 유럽으로 침투한다. 외부로 떠넘긴 위험이 수평선을 타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위험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할 뿐 아니라, 위험사회의 도래가 가져오는 개인의 문제에 주목한다. 개인의 자율성이 증대됐지만 '위험'이 사회적·제도적 틀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불안'을 안겨주었다. 산업사회의 변영과 함께 현대적 사회제도가 가져오는 위험에서 개인주의화의 증가가 낳고 있는 위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이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 대한민국은 지금 악성 위험사회

‘1:29:30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sup>Heinrich's law</sup>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1건의 대형사고 이전에 29건의 중규모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300건 정도의 조짐과 예후들이 나타난다는 원리다. 예를 들어 잠실의 롯데백화점 주변의 싱크홀과 지하의 균열 등 작은 조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더 큰 사고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고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 위험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인리히 법칙에 입각해서 작은 징후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2014년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 사건과 세월호 참사,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과 천연료 공장 소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안타까운 사건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결과가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정확하게 예견하기 어렵고, 자연재해에서 비롯되는 원전 폭발사고의 재앙 가능성을 떠안으며 살고 있다.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유전자 조작 식품이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채 밝혀지기 전에 식탁을 채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밀양 화재 사건이 하인리히 법칙의 29에 속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진단이 무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 사회적경제, ‘위험사회’의 렌즈 장착

산업사회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쌓아올린 ‘근대화’ 사회라고 하지만, 조직이나 생활 영역에서는 여전히 관료제나 계급적인 측면이 많이

남아 있다. 이른바, ‘반쪽 근대성’이라 불리는 산업사회의 이러한 경직성은 위험 요인을 사회적·제도적 수준에서 더불어 함께 답을 찾기보다는, 개인 각자가 위험사회에 대처하도록 방치해왔다. 울리히 벡은 개인의 위험 인식이 산업제도에 의해 축소되지 않고 돌파하려면 ‘진지한 성찰’과 ‘민주주의’가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진지하게 성찰한다는 것은 확률 숫자의 크기로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률과 연관된 사건의 심리적 파급 효과, 사건의 위험이 알려지거나 관리되는 방식 등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위험사회를 진단한다』의 저자 홍성태 교수는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한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찰적 반성을 강화하고, 하위정치·시민정치를 활성화하여 제도정치에 일정한 변화를 주자는 의미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위험사회’가 요청하는 성찰적인 위험 진단과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같은 위험사회를 살면서도 개인의 위험 인식과 대응 방식이 고립되지 않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적극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한다. 제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거나 소홀하게 다뤄지는 위험의 인자들을 진지하게 ‘위험’으로 인식하게 하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기도 한다.

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민주적 원리로 운영되는 호혜적인 경제 조직을 의미한다. 위험사회와 산업사회의 구분에 비추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은 태생적으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의 안전을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는 우리를 둘러싼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안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를 둘러싼 여러 변수들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기도 한다. '위험'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아도 불평등과 공동체의 회복, 안전한 먹거리, 에너지 문제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사회적경제 전 영역은 '위기사회'라는 관점에서 사회를 인식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백이 요청한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주체적 노력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방법론을 통해 전면화되기를 바라본다.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사업적으로 구현하거나 그 활동을 돕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 손가락 절단사고 응급키트 제작업체 'Finger119'

지난해 7월, 근무 중에 절단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년 2월, 당시 27세였던 김 모 씨는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손가락 접합수술 등 1년 넘게 4차례 입원치료와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12등급의 장해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큰 절망에 빠져 2010년 초 조울증(양극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환청과 망상, 불면증 등으로 3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4년 3월, 거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신고되는 절단 사고는 연 8,000여 건 정도다.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뒤 직장에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23.5%에 불과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경우 가정은 파괴되고 자존감은 상실된다. 하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연 2만 건 정도의 절단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산업 현장의 응급처치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기 짝이 없고, 최근엔 절단사고 환자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다.

절단사고 중 80% 가량은 손 또는 손가락 사고에 해당한다. 절단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바른 응급처치를 받고 절단된 손가락을 안전하게 보관해 병원까지 이송해갈 경우 80% 이상이 소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잘못된 응급처치와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수술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절단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Finger119(대표 이재욱)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한 청소년의 마음과 머리에서 시작됐다. 안산에 살면 손가락이 없는 공단 노동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음료 진열대에서 도움을 요청한 손님에게 가까이 가보니 한쪽 손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었다. Finger119의 팀원들은 절단사고 전용 응급키트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단사고 전용 응급키트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 Finger119는 연구기관 등과 함께 응급키트를 개발하며 기업의 꼴을 갖추기 시작했고, 2012년 소셜벤처경연대회 청소년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Finger119의 응급키트는 절단된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보관함, 절단된 손을 압박·지혈할 수 있는 지혈키트, 열면 바로 냉매가 작동하는 장치가 부착된 통으로 구성되었다. 손가락이 절단됨과 동시에 바로 괴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차갑게 만들어 세균 번식을 막으면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기 이식용 보관함과 유사한 형태다. 택시를 타고 긴급하게 이동할 것을 대비해 해당 지역의 절단사고 전문병원 리스트를 부착하기도 했다.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 성급한 대처로 몸의 일부를 잃지 않도록 돕는 응급키트를 만드는 소셜벤처. 이러한 아이디어에도 불과

하고 Finger119는 제작년 문을 닫았다. 필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아쉽게도 비즈니스 유지가 어려워 사업을 정리하고, 지역에서 청년 활동에 참여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도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고,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지금도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공장 근로자 수만 11만 명이며, 손가락이 잘려 재활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12만 명 중 원직 미복귀자가 7만 5,000여 명에 이른다. 뒤늦은 상사일지도 모르지만, 안산 지역의 공장에 Finger119의 응급키트를 배치했다면 어땠을까. 개별 공장이 구입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공 조달을 통해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했다면 어땠을까. 절단사고 응급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패키지로 마련했다면 어땠을까. 우리의 안전을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생각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 빨간색 소화기는 잊어라, 소방 관련 스타트업 ‘마커스랩’

2016년 하반기, 자연드림몰([www.icoop.or.kr](http://www.icoop.or.kr))에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코너가 마련되었다. 이곳에 2017년 10월 입점한 소방 관련 스타트업 ‘마커스랩’의 디자인 소화기는 입점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입점 물량 모두 완판되는 기록을 달성했다.

대개 빨간색 소화기는 직접 구매하는 사람이 드물고, 집 안에 있더라도 눈에 띄지 않게 감춰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커스랩(공동대표 박건태)’은 눈에 띄는 곳에 놓아야 화재 대응에 유리하다는 점을 우선 착안했다. ‘소화기=빨간색’이라는 편견을 깨고, 집 안 어느 곳에 두어도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해 일상 속 소품처럼 느껴지는 소화기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어느 집이든 소화기 한 대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방관의 이야기를 계기로, ‘탐나는 소화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담았다.

‘마커스랩’은 2014년 폐소방호스로 업사이클링 패션 제품을 만드는 ‘파



## 안전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든다 마커스랩

마커스랩은 소방안전산업을 홍보하고 안전의, 안전에 의한, 안전을 위한 실행 방안을 연구합니다. 디자인 소화기, 소방캐릭터 개발과 소방안전 페스티벌 진행 등으로 마커스랩은 우리 사회의 소방 안전을 지켜나갑니다.

출처 : <http://icoop.coop/?p=7984334>

이어마커스로 출발했으며,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2016년 문을 열었다. 파이어마커스는 ‘소방의 흔적’이라는 뜻의 소방패션 전문 브랜드다. 파이어마커스를 창업한 이규동 공동대표는 소방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소방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말하자면, 파이어마커스와 마커스랩은 형제 기업이다. 이들 판매수익금 중 5%는 한국소방복지재단이라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법인에 기부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안전에 관한 디자인과 캠페인을 펼치는 데 투자하고 있다.

2012~2014년 화재 통계를 보면 연평균 전체 화재사망자 300명 중 182명(60.7%)이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했다. 우리나라 주택의 소화기 보급률은 40%에 미치지 못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에서 소화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설상가상 집에 있는 소화기를 찾지 못해 소중한 골든타

### 안면 부착형 마스크



숨통은

안면 부착형 마스크로 개봉 후

기존 방독면과 같이 착용하는데

번거로움이나 착용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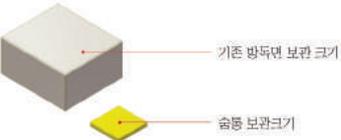
최소화 하기 위해

부착형 마스크형태로 개발하였습니다.

### 진공 압축 포장으로 인한 보관의 편의성



기존 방독면 부피 대비 1/10로 압축하여 소형화 하였으므로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합니다.



기존 방독면 보관 크기

숨통 보관 크기



기존 방독면 보관에 비해 소형화가 되어 가방 및 포켓에 보관이 용이합니다.

입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소화기는 가족 모두가 알고 있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저감시키는 결정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당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6,015명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380명으로 무려 60%나 감소했다. 보급률을 32%에서 96%까지 끌어올린 결과다. ‘마커스랩’의 디자인 소화기는 집집마다 소화기 보급률을 높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관의 수고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 5분의 골든타임, 긴급대피 방독마스크

#### ‘숨통’

지난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가스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사였다. 실제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피

출처 :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5852>

해의 70~80%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이다. 대개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는 유독가스에 의해 정신을 잃고, 그 상태에서 몸에 불이 붙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화재 초기 소화기로 불을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빨리 자리를 피하되 젖은 물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호흡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집 안에 방독면을 비치하기도 하지만, 직장이나 외부 실내에서 화재를 만났을 때는 속수무책이다. 언제 어디에서나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와이지에프(대표 김영구)’는 착용이 간편하고 보관도 용이한 소형 긴급대피 방독마스크 ‘숨통’을 개발해 지난해 12월 클라우드펀딩 ‘와디즈’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출시 3일 만에 100%를 돌파했다. 긴급대피 방독마스크 ‘숨통’ 프로젝트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휴대와 이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와이지에프’는 취업 취약계층 노동자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이다. 방독마스크 숨통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기술개발과제로 시작되었다. 착용이 간편하고 보관도 용이한 소형 방독마스크. 기존 방독면 착용의 번거로움과 착용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착형 마스크 형태로 개발됐다. 부피도 1/10로 압축해 소형화함으로써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해졌다. 가방 및 포켓에 보관할 수도 있다.

### 안전과 신뢰가 자산,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2013년 6월,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문을 연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대표 김희범)은 한 대기업에서 동고동락하던 동료 6명이 뭉쳐 탄생했다. 협동조합 안내문에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이들을 움직였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정직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은 업체 이름 그대로 건물의 공기 및 열 관리 설

비, 방수·방열 시스템 등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한다. 기존 유지·보수 업계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사 표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사 때 정품·정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른바 부풀리기 관행이 여전하다.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은 업계의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한 견적서와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품·정량 시공을 핵심적인 경영 전략으로 삼았다. 하자를 책임보증하는 ‘하자보증증권’도 발행한다.

일은 많이 주고, 임금은 최대한 적게 주며 이익을 늘리는 방식의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행태다. 김 대표는 “무리수를 두어 일을 시킬 경우 직원의 안전도 위험하지만 공사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지보수공사의 특성상 직원들이 책임감과 자율적인 권한이 안전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확고한 조직에서 상사가 무서우면 보고를 안 하고 축소·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를 하면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 매뉴얼도 유명무실하다. 이에 비해 협동조합은 안전 위험을 보고했다고 책망을 당하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스스로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김 대표는 “자율과 권한이 책임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시 기업의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 경영은 의사결정이 느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단 방향이 결정되면 추진력이 강하다. 특히 ‘안전’을 다루는 조직의 경우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모든 가능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이 그 자체로 안전을 담보하는 기업의 자산일 수 있다는 신념이 사회에 전염되기를 기대한다.

이슈

#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허세 부리기 좋은 집

김미정

두꺼비하우징 대표



레드와인과 레몬, 계피를 넣은 빵쇼의 달콤한 향기가 집 안 가득 퍼졌다. 2017년 12월 어느 토요일 아침, 이 집에 입주 파티가 열렸다. 말소리는 소곤거렸고 조심스러웠으며 어리둥절함이 흘렀다. 입학식 날 한 반에서 만난 친구들 사이처럼 아직은 어색한, 그런 느낌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곳은 허세 부리기 좋은 집, 두꺼비하우징 열한 번째 쉼어 하우스 share house ‘콘체르토 녹번 109’다.



###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하우징은 2010년 “저층주거지를 아파트처럼 관리해볼까요?”라는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쇠퇴하는 저층주거지에서 쓰레기 관리, 택배 보관과 같은 편리한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고 노후한 도시 인프라와 개별 가구의 물리적 환경을 향상하여 점진적으로 주거지를 개선하려는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마을 안에 일자리가 생기고 협력적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적 도시 재생이 목표였다.

강제 이주와 폭력적인 철거를 수반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삶의 환경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대안을 찾으려 했다. 기존 도시재생은 새롭게 조성

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일부 사람들만 이익을 취함으로써 갈등과 소외, 배제를 불러일으켰다. 상생하는 삶터로서 도시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역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수많은 사람과 조직들이 만나 살고 있는 곳이다. 강렬한 의지를 가진 한두 사람의 힘이나 공공의 주도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원을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 해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면으로부터 공감하고 스스로 주도하지 않는다면 곧 실패하고 만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고, 조절하는 협력적 관계들이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야 멀리, 깊게 흐를 수 있다. 자원의 투입, 정책적 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외에 관계의 깊이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도시 정책의 계획과 실현



도시재생(공동체 활성화 마을학교)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정주 환경에 대해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형식적인 권리만 있었다. 우리는 “동네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하는 게 어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정주 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발굴하고 지원하는 매개자가 되고자 했다. 별다르게 무엇을 했다고보다 마을에서 신나게 놀았다.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우리와 우리가 하는 일을 소개했다. 무엇을 해볼까 작당하고 몸으로 부딪쳐 익히고 배웠다. 주민들과 밥 먹고, 청소하고, 농사짓고, 잔치하고, 일을 꾸미고 뭐든 해보려고 애쓴 것이 우리가 한 일의 거의 전부였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성실하게 무엇이라도 꾸준히 하면 생각지도 못한 큰일을 이루고야 만다는 좋은 경험과 신뢰가 쌓였다. 신뢰야말로 마을에서 발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다. 상호 신뢰가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관계로 자리 잡는다면 어려운 일도 머리를 맞대어 풀어갈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토대다. 그런데 마을에서 신나게 놀던 두꺼비하우스는 모래놀이를 하며 부른 노래처럼 ‘헌집 고쳐 새집을 주었을까?’

## 뜻밖에도 집은 허약하기 짝이 없다

어느 해는 눈물 속 빠지도록 추운 날이 열흘 넘도록 계속되었다. 어느 해는 숨 막히는 더위가 늦도록 지속되었다. 습 없이 비가 오기도 했다. 기후 변화가 일상을 위협했다. 나쁜 상황이 지속되면 가장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터지는 법이다.

1980~90년대에 벽돌로 지은 집이 많은 저층주거지의 집마다 곰팡이가 피고, 물이 줄줄 샀다. 물리적 성능이 낮은 것이다. 이 집들의 형식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단열재를 넣는 중단열이 많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를 틈



집수리 학교

없이 꼼꼼하게 시공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올바르게 시공한 곳이 드물었다. 나무와 알루미늄 복합으로 구성된 창은 통신용 전선,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면서 열이 빠져나가는 바람 길이 되었다. 집집마다 난방비 적정으로 보일러 켜기를 무서워하고 추위로 떨었다. 쓰지 않는 방이나 구석진 곳에는 곰팡이가 만개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는 까다롭고 비용이 높았으므로 주민들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당장 눈앞의 곤란을 없애는 땀질식 처방을 선택하는 편이었다. 주민들의 지불 역량이 낮은 것도 원인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곧 허물어 새로 지을 것이고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생각도 작용했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에 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낮기 때문이었다. 2025년부터 민간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도 제로에너지<sup>1</sup>가 의무화되지만 저층주거지 노후 건축물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다. 오래된 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지만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주거지 재생의 숙제다.

2017년 11월 17일 포항시 흥해읍에서 진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의 강진이었고, 진원지가 얕아 2016년 비슷한 진도 규모의 경주 지진보다 피해가 훨씬 컸다. 사람들은 비로소 건물 구조가 안전한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노후 주거지 건축물은 대부분 지진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중 취약한 곳을 꼽으라면 단연 기초다.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집은 지반에 약간의 충격이 가해져도 침하가 발생하기 쉽고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생기며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 안타깝게도 저층주거지에는 이런 집이 상당하다. 올바른 시공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은 대충 처리하는 건

1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이룬 건축물을 '에너지제로(0)주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로 난방, 냉방, 온수 등을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 기술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가 2015년 11월 23일 발표한 '2030년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국내 신축되는 건물이 모두 '제로에너지'로 건축되어야 한다. (편집자 주)

설 관행으로 지은 집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지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 드물게 육안이나 장비를 통해 확인해보면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이 무모한 모험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부족한 집을 빠르게 공급해왔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마구 찍어내듯이 지었던 집들은 이제 부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었던 나쁜 관행들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 노후 주거지 경관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으므로 보존 정책을 통해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집들은 어쩌면 빵처럼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슬쩍 밀어 부서질 정도인지 견딜 만한지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야말로 공포스러운 일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집을 알아갈수록 고치는 일이 두렵다. 헌집 고쳐 새집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집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보다 짧다

2018년 1월, 국토부장관은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40년이었던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축소한 지 4년만의 일이다. 재건축은 건물의 물리적 수명이 다했을 때보다 사회적 수명이 다했을 때 추진된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보다 새로 지을 때 경제적 효용이 훨씬 크다면 재건축이 추진된다. 시기와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2003년 재건축 연한을 20~40년으로 차등 적용하기 전에는 대체로 20년이었다. “20년이 지나면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경험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론 큰 흔적을 남겼다. 누구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오랫동안 살아가기를 기대하지 않고 언젠가는 떠날 공간으로 간주한다. 노후 주거지일수록 이런 경향은 커진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기대하는 것이 재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인 삶은 어떤 것인가? 집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거나, 한 장소에 뿌리내리지 않고 언젠가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다. 정신 차리기 어려운 변화 속에서 속도에 맞추어 살거나 속도보다 빠르게 헤엄쳐 다녀야 한다. 변화의 속도에 맞추는 것은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도태되거나 살아남거나…. 모든 변화는 물질로 환원되고, 성패는 취득한 물질의 양으로 평가된다. 이런 현실에서 집이 삶을 담는 정서적 그릇이 되기를 시도하고, 천천히 흘러 마침내 삶과 함께 시간조차 담아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일은 유적이 되어 구경하는 대상이 된 고택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집의 사회적 수명은 사람보다 짧다. 심지어 짓는 순간의 성능과 품질이 엉망이었던 집의 물리적 수명은 사회적 수명만큼이나 짧다. 쓸 만한 상태로 오랫동안 집을 사용하는 것이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효용이 낮은 일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난다. 촘촘하게 벽들이 이어져 말소리, 발소리를 실어 나르던 골목과 붉은 벽돌로 지은 집들이 일거에 소멸되고 웅장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극단적인 변화는 이런 이유로 지지를 얻는다.

대규모 재개발이 주민들을 뺄 뚝 떼어서 시행자, 건설사, 부동산 금융의 배만 불린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고쳐 살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경기 후퇴가 계속되고 집값 상승이 둔화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점진적인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최근 몇 년 동안 동네에는 발 빠른 선수들이 나타나 부지런히 소규모 개발을 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집들이 새로운 집으로 대체되었다. 이 일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동네 사람들은 바뀌고 관계망은 흩어지고 있다. 거주민들은 불안해하거나 기회를 엿본다.

지금의 마을은 사람들이 떠나고 타자들로 채워지며 익명성만이 존재하

는 곳인가? 사람이 바뀌면서 기존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는 것일까? 쾌적한 환경과 이타적 커뮤니티가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마을에는 바람의 사람도 흙의 사람도 필요하다

2014년 마을의 빈집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했던 고민은 꽤 단순했다. 빈집을 버려두느니 잘 고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거실이나 욕실, 주방과 같이 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함께 쓴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소득에서 주거비 비율을 낮출 수 있다면 줄어든 비용만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꿈꿀 수 있을 것이다. 타인과 함께 살면서 혼자서 견여야 할 외로움이 덜어진다면 일석이조가 된다. 이 느슨한 관계가 집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마을로 확대된다면 활기 넘치는 지역이 될 것이다. 빈집을 청년들이 채우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에만 주목했던 시선이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 이타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 경쟁 중심의 승자독식 사회에서 협력적인 사회로 진화하고 개인의 행복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고민이 있었다. 마을에는 고쳐서 쓸 만한 집이 있고, 다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을 사람들의 활동도 필요하다.

오랫동안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흙의 사람이다. 마을의 토대고 역사며 환경과 울타리이다. 갈등이 있거나 협력이 필요할 때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 모아 견인하기도 한다. 이 울타리가 단혀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평화로운 마을이어야 한다. 골목 축제를 하거나 마을 학교를 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공공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

는 행정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마을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열려 있어야 지속가능한 지역이 된다. 이들은 바람의 사람이다. 빈집을 재생했을 때 이곳에 살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도 바람의 사람이다.

‘비어 있는 집에서 함께 사는 집으로’ 첫 번째 공가<sup>空家</sup> 프로젝트는 수색중산 뉴타운 구역 중 중산5구역 안에 있는 빈집이었다. 지하철역에서 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돌로 만든 계단을 3m 정도 올라가면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다. 3개 층에 화장실 4개, 평균 11㎡ 정도 되는 방이 7개, 넓은 거실과 부엌, 식당이 있는 곳이었다. 이 집을 시작으로 4년 동안 10개의 집을 만들었다.

쾌적한 주거 환경, 부담 가능한 주거비, 정주하는 삶, 자립하는 커뮤니티를 목표로 집을 만들고 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찾아다녔던 것은 방 하나에 갇힐 수도 있는 셰어하우스에서 새 소리가 들리고, 햇빛이 내려앉는 정원이 타인끼리 살아가는 긴장감을 늦추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 형식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 달에 한 번쯤 반상회를 진행하는 것과, 서로 양해할 수 있고 배려하기 위한 작은 규칙 정도가 이 집들에 부여된 조건이었다. 가능한 적게 개입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스스로 조화롭게 살아감으로써 운영·관리비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목표 중 하나였다. 이는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을로 관계망을 넓히고 자립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게 되었을까? 부유하는 삶에서 정주하는 삶으로 바뀌었을까?

###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허세 부리기 좋은 집

열 번째 집을 만들면서 이가 빠진 듯한 부족함이 밀려왔다. 빈집을 고치거나 고시원을 청년 공유주택으로 만드는 것은 서울시 사회주택정책으로 편입되어 공사비를 지원받는다. 셰어하우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재테크 수



단이 되었다. 자본의 속도는 빛보다 빠르다. 쫓기고 있었다. 양적 성과를 요구하는 공공의 정책 요구와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들 사이에서 ‘공간을 공유하고 장소를 재생’하겠다는 미션은 사라져갔다.

돌이켜보면 첫 번째 빈집 리모델링 이후 거듭된 실패 속에 있었다. 기존 주택의 물리적 상태는 공간을 상품으로 공급할 때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하수구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이 넘치거나 교체하지 못한 오래된 배관에서 누수가 생겼고 지붕 속에 고양이가 살기도 했다. 알고 보니



비어 있는 집에서 함께 사는 집으로-공유주택(빈집프로젝트)

노후 주거지에서 길고양이는 쥐만큼이나 불편하고 일상적인 존재였다. 유난히 방 하나가 추운 집은 보일러 고장이 아니라 분배기 연결 표시의 오류였음을 오랜 시간을 들여 에너지 진단을 한 후에야 발견할 수 있었다. 리모델링한 건축물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물리적 오류를 일으켰다. 대체로서 투름이 부른 결과였다.

사용할 수 있는 사회투자기금의 사용 기한은 투자 회수 기간에 비해 짧았고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다. 수익률은 낮았고 서비스는 고도화되지 못



입주 설명회

했다. 정주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잠시 머무는 공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상품으로 공간을 작동시키는 것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호혜적 공간으로 공급하는 것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던 것이다. 애매한 태도는 냉정한 이별보다 나쁘다. 삶의 문제는 주거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에도 공급량에 쫓기고 있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식이다.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공급하고 싶은 집을 만들고 있었다. 속도에 쫓겨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다. 혼자 끽끽거리는 것으로는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사회적경제 친구들에게 무작정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집을 만들 테니 내용은 함께 채워가는 게 어때요?” 집은 그릇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람들



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집 하나를 고치는 데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이 필요하다. 그릇을 사고 가구를 만들고 창호를 주문한다. 가전제품도 사고 의자도 사야 한다. 이 큰돈을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이에서 유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택 유지관리 전문 조직인 '무엇이든협동조합'과 공사를 협력하고, 입주 선물로 공정무역 제품을 주문하거나 사회적기업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우리 집을 쓸 수 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태양광패널을 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부터 주문하고 협력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쓰는 전기량을 함께 계산해보고, 원리를 파악하면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입주자를 포함해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시도해볼 수 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 사는 사람들과 같이 고민해볼 수 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밌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협력은 셀 수 없을 만큼 확대되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을 만들어 따뜻하거나 시원한 집을 공급하더라도 거주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저 지출된 비용에 불과한 것이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주도성을 갖는 길이다. 잠시 빌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주체가 된다. 협력과 연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 일상을 바꿈으로서 모두를 바꾸는 거창한 계획...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바이올린, 독주 악기들이 협연하는 콘체르토 녹번 109다.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이 정도 허세 짙은 부러도 좋지 않은가?

## 아직은 서투릅니다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셜 미션<sup>social mission</sup>이 분명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명확해야 한다. 시장의 흐름과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통찰해야 하며, 그 변화를 뛰어넘는 시도와 성과도 만들어야 한다. 포트르 크로포트킨은 “만물은 서로 돕는다”고 했다. 함께 해나간다면 깊고 멀리 흐를 것이다.

#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 우리가 함께 걷는 길

이형우

루트임팩트 매니저



## 공유경제의 참 의미 : 경제적 교환보다 사회적 교환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당시 뉴욕에서는 사무실 공실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 착안하여 아담 노이만Adam Neumann과 미구엘 맥켈비Miguel McKelvey는 2010년 위워크WeWork를 창업하게 된다. 위워크는 빈 오피스 공간을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임대하고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공유 오피스Co-working Space를 만들어 기업가, 프리랜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위워크는 2018년 2월 기준 전 세계 60개 도시에 30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2016년 위워크의 한국 진출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청년들의 공유 공간 조성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은 역시 위워크로 서울에만 7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4개 지점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패스트파이브FASTFIVE<sup>1</sup>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카드도 대기업 중 가장 먼저 공유 오피스 사업에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 안에 헤이그라운드HEYGROUND도 함께 하고 있다.

위워크의 성공은 단순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임대사업의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워크의 성공 뒤에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에어비엔비Airbnb, 우버UBER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소유한 재산의 나눔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 사업으로 쏘카SOCAR를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에어비엔비와 우버는 더 이상 공유경제기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패스트파이브는 보증금이 없는 월 회원으로 인테리어가 갖춰진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 스타트업이다. 2015년 설립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총 12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편집자 주)

2015년 10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sup>2</sup>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CC 글로벌 서밋’에서 요하이 벤클러<sup>Yochai Benkler</sup> 교수는 “공유지라는 아이디어와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공유경제의 근본은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사회적 교환’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에어비엔비와 우버의 사업 모델은 공유경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헤이그라운드는 공유경제의 사회적 교환이라는 관점에 집중하기로 했다.

### 사회적 교환의 힘 : 체인지메이커<sup>Changemaker</sup>를 돕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구직도 어렵지만 이상하게도 구인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구직자들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청년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 돈의 가치보다 삶의 질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가치 추구 문화 확산에 힘입어 공유경제, 즉 사회적 가치 교환의 움직임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익 창출과 더불어 사회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투자 주체들 또한 수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공공그라운드<sup>3</sup>의 행보가 그렇다. 공공그라운드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보존하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정 수익률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한 이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원하는 구조를 갖는다. 또한 공공그라운드의 투자 철학에 공감하는 개인들의 투자까지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

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는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3 지난해 9월 공공그라운드는 서울 대학로 썬더 사옥을 인수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보존되고 활용한다는 목적에 따라 새 단장을 끝내고 올해 2월부터 교육과 미디어 영역에서 혁신을 도모하는 단체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곳 역시 NGO 및 사회적 선의를 가진 기업들이 함께 일하는 코워킹 커뮤니티(Co-Working Community)로 운영되고 있다.

루트임팩트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체인지메이커라고 일컫는다.<sup>4</sup> 루트임팩트는 체인지메이커들의 일과 삶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헤이그라운드가 바로 체인지메이커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체인지메이커들은 대체로 열악한 일의 환경에 놓여 있다.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번듯한 사무실을 차리는 것부터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다. 그러다보니 적합한 인재를 뽑는 일 역시 어렵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위 ‘소셜벤처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응원의 말을 듣기 어렵다. 아무리 설명해도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나마 그냥 ‘좋은 일 하는구나’하고 이해해주면 다행이다. 한편, 아직까지 체인지메이커들의 여정이 오래되지 않았기에 새로 시작하는 누군가는 체인지메이커 롤모델을 찾기 쉽지 않다. 그리고 가장 큰 도전은 역시 위에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렵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고 또 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도전들을 겪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헤이그라운드의 존재 목적이 있다. 더 멋진 사무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며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멋진 동료들과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변화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체인지메이커는 사회적 선의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http://rootimpact.org/v2/change.php>

그 체인지메이킹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일의 환경’을 만들고자 헤이그라운드를 준비하며 체인지메이커의 커뮤니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Changemaker Community)의 구성 요소

: 사명, 공간, 구성원

루트임팩트는 더 나은 일의 환경을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더 나은 일의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리적 공간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 헤이그라운드가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공유 오피스를 넘어 커뮤니티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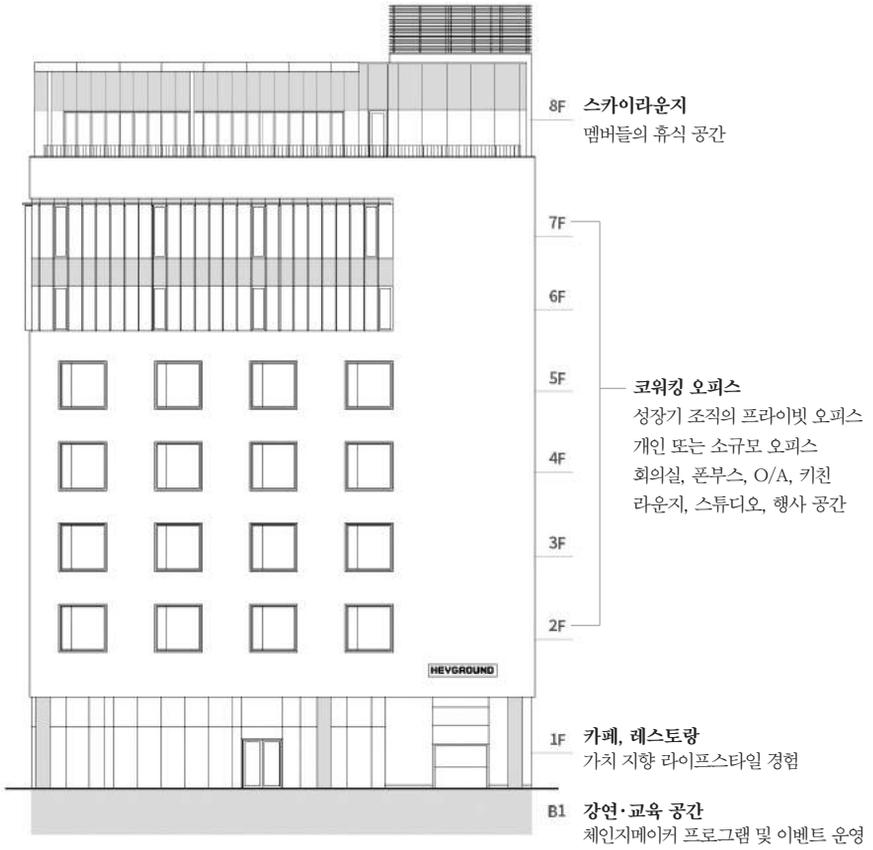
#### 좋은 커뮤니티의 구성 요소

사명 Purpose	공간 Space	구성원 People
모여야 하는 이유	물리적 기반	사명에 공감하는 사람들

\* 루트임팩트 5주년 컨퍼런스 ‘체인지메이커의 일(Work)’ 세션 중에서

좋은 커뮤니티를 완성하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째로 체인지메이커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둘째로 그들을 모이게 할 물리적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헤이그라운드의 사명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워 나가야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는 체인지메이커들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체인지메이커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변화를 키운다.’ 이것이 헤이그라운드의 사명이다. 체인지메이커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



고 그 성장이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체인지메이커들의 다소 부족한 환경적 요인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헤이그라운드<sup>5</sup>의 사명이다. 그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커뮤니티를 구성할 두 번째 요소는 공간이다. 헤이그라운드<sup>5</sup>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성수동에 1,8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성수동은 이미 2014년부터 루트임팩트, *sopoong*<sup>5</sup>, 임팩트스퀘어<sup>6</sup> 등을 주축으로 소셜벤처 벨리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며, 강남 및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 또한 뛰어난 곳이었다.

헤이그라운드<sup>5</sup>는 총 9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2~7층은 코워킹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3개 층은 업무 지원 공간이다. 8층 스카이라운지는 멤버들의 휴식 그리고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업무 시간 동안에는 멤버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휴식과 간단한 회의, 편안한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대관 공간으로 운영하여 멤버 및 외부인들의 이벤트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워킹 오피스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 체인지메이커 조직들의 성장 단계와 규모,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독립성 정도에 따라 공간을 구분했다. 그리하여 3~6인, 10~100인 규모의 프라이빗 오피스, 4~8인 단위의 셀형 지정 좌석, 1인 단위의 오픈형 지정좌석의 업무 공간을 마련했다. 1층은 체인지메이커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돌본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되는 카페,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하1층은 체인지메이커의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쇼카코리아에서 강연 및 교육 공간으로 운

5 사회문제를 시장 안에서 벤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벤처 인큐베이터로 2008년 설립해 쏘카, 텀블벅, 스페이스클라우드 등에 투자했다. (편집자 주)  
6 2010년 설립돼 기업사회공헌, CSV, 비영리 프로젝트 등을 자문, 연구해왔으며, 소셜벤처들과의 사업 협력, 공동창업, 운영, 투자 등의 형태로 성장을 고민하고 협력해오고 있다. (편집자 주)



CFO 서비스 Kick-off meeting



GSBI 워크샵

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체인지메이커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대관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체인지메이커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헤이그라운드와 사명과 함께하는 구성원들이다. 지금은 헤이그라운드에 약 80개 기업과 530여명의 체인지메이커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헤이그라운드를 기획할 당시에는 무에서 시작하여 뜻을 함께할 동반자들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헤이그라운드와 사명에 공감하는 구성원을 모으기 위해 그라운드빌딩프로세스라는 일종의 간담회와 같은 작업을 2년간 준비했다. 헤이그라운드와 잠재 입주사들을 모아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헤이그라운드와 공간을 함께 만들어나갈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라운드빌딩프로세스를 통해 좀 더 나은 공간, 커뮤니티에 대한 체인지메이커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또한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잠재 입주사들에게 헤이그라운드와 대한 소속감을 만들어주었고, 그것이 현재의 헤이그라운드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었다. 이런 소중한 준비 시간들을 통해 2017년 6월 헤이그라운드가 안정적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 더 나은 일의 환경 : 성장지원 플랫폼을 만든다

헤이그라운드는 긴 시간 잠재 입주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오픈 1개월 내 입주율이 80%에 달했고, 이후 3개월 안에 공실률을 3%까지 낮출 수 있었다. 헤이그라운드는 다시 본연의 목적을 돌아봤다. 더 나은 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라운드빌딩프로세스를 통해 파악했던 잠재 입주사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인지메이커들의 성장을 위한 성장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네트워킹 파티

체인지메이커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대체로 작은 규모로 인한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법률, 특허, 재무, 회계, 세무, 통번역, 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루트임팩트와 제휴하고 있는 법무법인, 특허사무소, 회계사들의 프로보노<sup>Pro Bono</sup> 활동을 통해 'Hey Hour'라는 전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체인지메이커들의 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임팩트커리



어라는 공동 채용 및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커뮤니티 매니저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다. 커뮤니티 매니저들은 체인지메이커들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하고,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때로는 꿀벌이 되어 서로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것도 한다.

###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을 커뮤니티 혹은 공동체라고 칭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헤이그라운드가 진정한 의미의 체인지메이커 코워킹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사실 커뮤니티, 공동체는 그것을 조성하는 사람이 언급할 것은 아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속감을 통해 이곳이 커뮤니티인지 단순히 코워킹 스페이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헤이그라운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커뮤니티로서의 요소 몇 가지를 함께하는 이들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서로가 체인지메이커라고 느끼는 동질성, 그리고 서로를 함께 성장해야 할 동료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각자가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서로 함께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이들이 이 공간을 채웠다면 앞선 언급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모두가 스타트업이며, 청년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서로를 응집하게 할 에



임팩트 생태계 조성자를 위한 작은 세미나

너지는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체인지메이커로서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한다는, 그 사명이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헤이그라운드는 체인지메이커들의 여정을 돕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Changemaking Journey With You’ 헤이그라운드의 슬로건이다. 헤이그라운드에 들어와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한



명의 체인지메이커 혹은 잠재적 체인지메이커가 헤이그라운드  
드에 입주해 성장을 거듭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을  
때 헤이그라운드를 떠나 임팩트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체인  
지메이커의 롤모델로 자리 잡을 모습을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체인지메이커들의 일의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 임팩트 생태계의 조성

헤이그라운드는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 조성을 넘어 다양  
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임팩트 생태계를 만들려  
한다. 임팩트 생태계는 앞서 언급했던 공유경제의 근본 원  
리인 사회적 가치의 교환과 연결된다. 임팩트 생태계가 조  
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미디어, 투자자, 대기업, 가치지향 소비  
자, 지원기관, 프로보노, 교육기관 등의 유기적 협업이 기초  
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들에게 지원만을 강요할 순 없다.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임팩트 생태계의 틀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할 수는 없다. 특히나 투자  
자, 정부기관 입장에서 퍼주기식 지원을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연 생태계에도 먹이사슬이 존재하기에 그 생태계가 지  
속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다. 임팩트 생태계 안에서도 각자  
의 위치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아무래도 가치지향 문화의 확산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내놓은 2018

년 10대 트렌드에도 ‘플라시보 소비’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지금까지 가성비 소비의 기준이었다면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가 소비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소비 트렌드에서 바라본 플라시보 소비는 초개인주의에서 비롯된 주관성이 주된 배경이지만, 가치지향 소비자의 관점에서 플라시보 소비의 확산은 임팩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의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생산자로서의 체인지메이커들은 가치지향 소비자에게 더 좋은 가치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2017년 10월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을만큼 임팩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탕이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힘의 방향이 한 방향을 향할 때, 더욱 빠르게 힘 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을 바탕으로 삼아 지자체 및 시민사회에서는 진정성있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가치를 추구하며 함께 걷는 길

청년들의 공유 공간과 협업 그리고 공유경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어쩌면 고용 불안, 부의 양극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저성장기에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하나의 대안일지 모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사회적 가치의 창출 그리고 교환은 물질의 소유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경제성장을 위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달려 얻어낸 양적 성장으로 인한 성장통을 우리는 겪어왔다.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잊고 지냈지만 더 소중한 가치인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시민의식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일 차례다. 성장의 정도로 줄 세우

기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동일한 자원과 노력을 쏟아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해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길을 혼자 걷는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뜻을 함께하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 여정이 험난할 수 있어도 한번 가봄직한 길일 것이다. 함께 걷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기 때문이다.

생협 zoom in

김성광

flysg2@hani.co.kr

## 봄 이 여 오 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 일부가 물방울이 되어 대지를 촉촉하게 적신다.  
하지만 아직 겨울이다. 한 번의 훈풍으로 완전한 봄이 오진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로 단단하게 얼어붙은 한반도 빙벽은 언제쯤 녹아내릴까.  
봄이여 오라.



기획연재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1

사회적경제로  
가난한 사람을 엮다

{ 송경용 신부 }

차형석 <시사IN> 기자

성공회의 송경용 신부는 ‘걷는교회’ 사제다.

7년간의 영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2010년 1월,

북한산에서 첫 미사를 하면서 걷는교회가 시작되었다.

특정한 예배당 건물을 두지 않고 어떤 곳도 성소가 될 수 있는 교회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농성 텐트에서, 세월호 광장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예배를 행했다.

송경용 신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송경용 신부는 그동안 여러 사회적경제 관련 일을 해왔다.

송 신부의 전·현 직함도 다양하다.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공동의장,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전),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장(전),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사장 등등. 인터뷰를 한 2월 14일에도

공정무역 관련 회의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지자체·기업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한다.

최근 한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성직자로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나도 그게 궁금했다. 그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 신부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2007년에 펴낸 저서 『사람과 사람』을 보면 ‘송경용 신부 하면 사회복지운동 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나온다.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회적경제든 사회복지든 내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적 존엄을 지키면서 먹고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가난이 주는 처절함을 경험했고, 가난의 닳을 헤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실감했다. 1979년에 연세대 건축학과에 들어갔는데, 대학 입학 전에 립살롱 허드렛일, 신문배달, 공장 노동, 독서실 총무 등 14가지 일을 해보았다. 야학을 하면서, 상계동·봉천동에서 '나눔의 집'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했다. 사회적경제든, 사회복지든 나에게는 추상적 가난이 아니라 구체적 가난을 실질적으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 >>> 『사람과 사람』에 야학과 나눔의 집에 대해 자세하게 썼다.

1979년 9월에 선배 둘의 권유로 상계동 야학(상계적십자청소년학교)에 갔다. 그 야학에서 가난한 청소년 노동자들을 만났다. 야학은 나에게 제2의 고향이었다. 그곳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1984년, 그 유명했던 상계동 철거 현장에서 기도를 했다. 절로 기도가 나왔다. 깡패들이 야학 제자들이 살던 집을 다 때려 부숴다. '주님, 다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장면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다(웃음). 그 기도 때문에 여태까지 이려고 있다(웃음). 야학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1986년에 성공회 천신신학교에 들어갔다.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 상계동 나눔의 집을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집이자 교회다. 나눔의 집을 하면서 목표가 있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체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나나가서 낚시해라(웃음). 삶은 한 시도 유예할 수 없다. 특히 가난이 겹치면 정말 괴롭고 힘들다. 그래서 어린이집, 공부방, 어머니교실처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나눔의 집에서 먼저 했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주인이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엘리트들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 나눔의 집을 가난한 이들의 지역운동센터, 열린 교회로 만들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상계동 야학, 철거

싸움을 거치면서 파괴되고 해체되고 다 떠나더라. 굳은 맹세와 무수한 말들을 남겼던 이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나중에 보면 구부러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그 친구들의 삶이 바로 내 삶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 그때 내린 결론이 이렇다. 사랑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다.

신학교를 다니는 스물일곱 살 청년 송경용은 사제 서품을 받기도 전인 1986년에 교회의 지원을 받아 상계동 나눔의 집을 세웠다(1991년에 부제 서품을, 1993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박경조 신부, 김성수 신부 등이 송 신부를 격려하며 ‘병풍’이 되어주었다. 송 신부는 1988년에 성북 나눔의 집을, 1990년에 봉천동 나눔의 집을 열었다. 송경용 신부는 봉천동에서 11년을 함께 살았다. 봉천동 시절, 송 신부는 노동자협동조합을 ‘발견’하게 되었다.

### >>> 노동자협동조합 ‘나레건설’을 만들었는데?

1992년 9월에 나눔의 집 화재 사건이 났다. 봉천동 사람들이 나눔의 집 재건축을 도왔다. 일하는 분들에게 노동자협동조합을 소개하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때 노동자협동조합 ‘나누며 섬기는 건설노동자 공동체(나섬건설)’가 만들어졌다. 그 당시에 빈민운동의 선배인 허병섭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많이 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이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을까’ 공부 주제였다. 외국에는 뭐가 있나 찾아보았다.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 몬드라곤, 이탈리아 레가코프 등을 발견했다. 이거다, 싶었다. 허 목사님은 월곡동 달동네에서 건설노동자 공동체 ‘일꾼두레’를 만들었다. 나중에 둘이 합쳐 ‘나레건설’이 되었다.

## >>> 당시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없었는데?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 수가 없어 주식회사로 하되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회사 이름에 ‘협동조합’을 붙이면 안 된다고 하기에 ‘나들도 꿀탕 먹어봐라’ 해서 제일 긴 이름을 만들었다. ‘나누며 섬기는 건설노동자 공동체 나레종합건설’. 등기소 갔더니 ‘정말 이 이름 다 쓸 거냐, 줄여달라’ 하기에 ‘뭣 줄인다’고 했다. 아마 역사상 가장 긴 회사 이름 아닐까(웃음). 우리끼리는 ‘나레건설’이라고 불렀다.

창립하고서 명함을 만들었는데, 장년이신 분들이 첫 명함을 손을 떨며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노동을 해온 분들이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받아들던 그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이름은 있지만 자신의 이름 앞에 쓸 수 있는 ‘사회적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명함은 그냥 종이가 아니었다. 명함이 있으나 없으나 무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깊고도 깊은 한 인간의 회한을 느꼈다.

## >>> 나레건설은 어땠나?

신문도 만들고 강령도 만들고 했는데, 4년간량 운영하고 쫓딱 망했다(웃음). 평창동의 고급 주택도 짓고, 수주를 제법 많이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돈이 들어오는데, 결산을 해보면 적자더라. 우리에게 경영 능력이 부족했다. 협동조합을 하려면 실제 경영 능력이 있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 즈음에 청소회사, 봉제공장, 도시락공장도 만들었다. 기술이 없는 이들이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봉천동 산동네 주민

The advertisement is for 'Nare Construction' (나레건설) and includes the following text:

- Top header: 협동조합 '나레건설' (Cooperative 'Nare Construction')
- Time: 1984년 6:30 (1984 June 30)
- Headline: 나레건설 (Nare Construction)
- Sub-headline: "잠깐! 특집호" (Brief! Special Issue)
- Main headline: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e deeply thank you for the appreciation you have given us over the past period!)
- Image: A man in a suit, likely the founder or a representative.
- Text below image: "협동조합 '나레건설', 이 국면의 기업으로 자리하기 위해 함께할 출자회원을 찾습니다" (We are looking for participating members to help 'Nare Construction' as a company in this phase.)
- Bottom text: "가장 확실한 수익! 쉬운 협동조합!" (Most reliable profit! Easy cooperative!)

협동조합 나레건설 창간 소식지  
(출처: (재)아이콕협동조합연구소 아카이브)

들과 남산터널 청소를 했다. 터널이 그렇게 긴 줄 몰랐다(웃음). 모두 협동 조합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실제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절감했다.

### >>>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자활센터를 최초로 제안했다고?

1995년에 국민복지기획단 회의 때 '저소득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생산자협동조합운동'을 발표했다. 이 발표가 자활센터 설립으로 이어졌다. 지금 자활센터가 하나의 복지 전달 체계가 되었다. 처음에 내 생각은 법과 제도, 정책을 기반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어 자활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구상했다. 복지와 노동의 통합 모델로 자활센터. 노동자협동조합은 그 수단이었다.

'자활' 활동을 하는 후배들이 잊지 말아야 할 세 이름이 있다. 최선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는 복지부 실장 때 철거민촌에 와서 철거민 철담에 올라 막걸리를 같이 마시며 이 문제를 고민했던 이다. 중앙부처 1, 2급 공무원이 철거민 철담에 올라 막걸리를 마신 건 그가 유일하다. 그리고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의 이해경 교수(현재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 회의 때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고 내 정책 제안을 끝까지 발표하도록 해준 분이다. 자활센터를 정책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KDI에서 빈곤 문제를 연구하던 권순원 박사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생산자협동조합운동에 대해 정부 측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논문을 쓰고 민관토론회를 주선했다. 자활사업의 방아쇠를 당겨준 열성적인 경제학자였다. 나레건설의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봉천동에서 지역 활동을 하던 송경용 신부가 '중앙무대'로 진출한 계기가 되었다. 송 신부는 노숙인들이 서울역으로 몰려든다는 뉴스를 보았다. 봉천동에서도 몇 가족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몇 명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얼마 뒤에 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다. 송경용 신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전국 실직노숙자 대책협의회’를 조직했다. 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도 만들었다. 지금은 익숙해진 푸드뱅크를 처음 시작한 것도 송경용 신부였다.

>>> IMF 외환위기 때 ‘민관’이 함께하는 일을 많이 추진했다.

우연찮게 해외에 나갈 때마다 외국의 노숙인 시설을 많이 보았다. 도시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봤다. 민관협력기구를 만들면서 ‘실직 노숙자’라는 말을 고집했다. 이름에 정책성이 들어가고 책임 주체가 규정된다. 명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달라지니까. 정부는 ‘실직’ ‘노숙자’라는 말을 넣고 싶어하지 않았다. 한 달 싸워 이름을 정하고 민관 협력기구를 만들었고, 종교계를 설득했다. 노숙자들이 대피할 쉼터를 만드느라 분주했다.

푸드뱅크는 복지부에 서울 동서남북을 담당할 4대의 트럭을 달라고 요청한 게 시작이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성공회 교회의 ‘두 번째 추수 second harvest’ 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교회 안 의자를 밀어놓고 노숙자들을 모아서 기업, 개인에게서 기부 받은 음식을 나누어 주더라. 첫 번째 추수는 밭에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추수를 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걸 본따서 기업, 호텔, 종교계 등으로부터 음식을 기부 받아 먹을거리 나눔운동을 시작했다. 그게 푸드뱅크 운동의 시작이다.

>>> 꽤 오랫동안 영국에서 생활했다고 들었다.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총 7년을 영국에서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공동모금회 개혁 싸움, 자활센터협회

일, 노숙인·장애인·청소년 쉼터 일을 계속 하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다. 영국에서 런던 성공회 한인교회 주임사제 등으로 있었다. 거기에 있으면서 건강을 회복했다. 영국에서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났다. 한국에서는 흔히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정도로 인식한다. 영국에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혁신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이더라. 한국에서 활동가들이 오면 많이 소개했다. 안내하고 일정 짜주고 같이 술 마시고(웃음). 영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활동가들이 1,000여 명 넘게 찾아온 것 같다.

### >>> 귀국해서 다시 사회적경제 일을 했는데.

영국에 있을 때 귀국하면 사회적경제 일은 안 하려고 했다. 그 전에 건강을 해칠 정도로 너무 했으니까. 2009년 귀국하고 성공회대에서 1년 동안 아시아시민사회대학 학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쪽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한다고, 석 달을 찾아오기에 결국 조건 걸고 수락했다.

### >>> 어떤 조건이었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사회적경제라는 우산을 만들자. 이 안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마을기업 등이다 들어오게 하자. 그리고 사람을 키우자.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우수한 사람이 들어오려면 운동장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가 기업 활동인데 시장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닌가. 대기업 중심 사회에서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호적인 정치 세력이 필요하니, 그 조직을 맡아보겠다고 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을 만났다. 사회적경제에 관

심 있는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을 만났다. 각 당에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생기고, 단체장들의 모임이 생긴 게 그 성과다. 또 양대 노총 전·현직 위원장과 만나 사회적경제와 노동, 사회적금융 관련 공부를 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을 소개했다. 지난 대선 때는 사회적경제를 국가 아젠다로 만들기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했다.

### >>> 사회적가치기본법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영국의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관련 뉴스를 매일 챙겨보았다. 2012년에 크리스 왈츠라는 영국 보수당 의원이 사회적가치법안(Social Value Act)을 발의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영국에서 이 법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이를 살폈다. 될까, 했는데 통과되더라.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구매할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영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최저가 입찰 방식을 택했다. 그러다보니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진다.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행정기관, 시민 다 불만이 생겼다. 크리스 왈츠 의원이 공공기관 입찰에서 사회적가치기준을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법안 전문을 받아보았다. 양동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적 현실에 맞게 안을 만들었다. 그때 문재인 당시 의원을 만났다. 문재인 의원이 법안을 20분 동안 읽어보더니 첫 마디가 “무서운 법이군요” 하더라. 법조인 출신답게 법안의 핵심을 바로 꿰뚫어 읽은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맞습니다. 이 법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신주의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입찰 기준을 바꾸면 민간기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영국이 그랬다. 영국의 수천 개 기업이 기준을 바꾸었다.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여러 사회적 가치에 가점을 두면 사회가 분명 바뀐다. 결국 문재인 의원이 사회적가치기본법안(공

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의원실과 공청회를 하기도 했다. 그 뒤 정치적 사건들이 이어져 국회 통과가 되지 못했다. 지금 김경수 의원을 거쳐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 >>>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반반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정권한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가 도입되고 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장 인사나 공공기관 평가 때 경영 효율성을 주로 봤다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배점을 더 높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가 행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모르면 공공기관장 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행정에 일부 도입되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법 하나로 우리 사회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

### >>> GSEF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데?

대학에 있을 때도 사회적경제 관련 대회를 주최했다. 처음에는 아시아 저개발국가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를 조직하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과 해외를 함께 다니면서 '글로벌 단위로 키우자'고 힘을 모으게 되었다. 민관 협치로 박원순 시장과 공동의장을 맡았다. 2013년에 처음 대회를 준비할 때는 500통 메일을 보내면 서너 통 답장이 오는 수준이었다. 서울에서 무슨 사회적경제를 조직하느냐고, 하는 느낌이었달까. 그런데 2016년 몬트리올 대회 때 65개국 355개 도시 대표, 민간 대표 2,000명이 왔다. 올해 10월 빌바오 대회에는 100개국 3,000명가량 올 것 같다. 우리가 만든 국제기구가 세계 최대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사회적경제가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 매년 협동조합 실태조사가 나오면 협동조합 1만 개인데, 절반이 사업을 중단했다며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곤 한다.

한국의 재벌은 어떻게 키웠다. 행정이 산업정책을 펼친 것이다. 땅 주고 세금 깎아주고 사업 영역 나누어 주고.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보라. 유럽에서는 사회적경제가 10~11%를 차지한다. 분명한 실체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사회주의니 뭐니 온갖 소리를 해대는 이들이 있다.

어떤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말 중에 '개나 소나 법칙'이 있다.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할 때 다 냉랭하고 지켜보고만 있으면 일이 안 된다. 처음에는 '개나 소나' 달라붙고 붐이 일어 야 알곡이 남는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붐업이 일어나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것이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각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류 경제학자들조차 '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고, 대안 경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유엔이 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을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다.

빌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부자들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한다. 한국의 부자들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정말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불평등이 심한 사회를 두고서, 자유만 이야기하고 규제만 풀어달라고 한다. 사회적경제만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도 없다. 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덫을 헤쳐가려는 작은 노력이자 몸부림인데, 이 실험마저 헤치려고 하면 안 된다.

나에게 유럽을 정의하라면 '수만 개의 사회가 그물처럼 얽혀 있는 사

회'라고 말한다. 그물에는 중심이 없다. 그물의 한 코, 한 코가 중심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당겨주고 같이 작동해야 그물로 쓰인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존재하는 것. 사회적경제의 원리도 이와 같다.

2007년에 송경용 신부가 쓴 『사람과 사람』에는 그가 어린 시절, 청년기에 겪은 지독한 가난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송 신부는 상계동 야학, 나눔의 집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다. 이런 삶의 궤적은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이어졌다. '사회적경제는 구체적 가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하나의 방안이었다'는 그의 말은 협동조합이 경제적 약자들의 강력한 필요의 산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송경용 신부는 '법, 제도, 정책'을 강조했다. 개인이 이루어낸 성과가 한 사례로 그쳐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통해 보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봉천동의 경험을 발제해 자활기관 제도화를 이끌어내는 등 여러 차례 '민관 협치'의 앞자리에 섰다. 법·제도·정책을 통한 보편화. 송경용 신부는 사회적경제의 큰 틀을 고민한다. 그런 면에서 송 신부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금융 부문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사회적금융에 대해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다. 민간자금을 모으고 보증제도를 활용해보려 했는데, '박근혜 치하'라 쉽지 않았다.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사회적금융이다"라고 말했다.

"너무 바빠 일을 줄여야겠다"고 하지만 '사회적경제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날 것 같다, 송 신부님'. 송경용 신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영화 제목이 내내 떠올랐다.

## 내일도 밥을 줄게, 나는 소치가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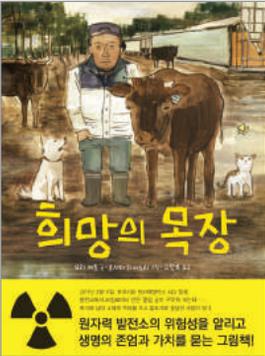
『희망의 목장』

모리 에토 글, 요시다 히사노리 그림, 고향욱 옮김

해와나무, 2016

임정은

빵과그림책협동조합



고양이 두 마리가 우리 집에 온 지도 1년이 조금 지났나 보다. 1년 전 이맘때 길고양이로 태어나 위기 상황에서 구조되어 보호소에 있던 아이 하나와 보호 가정에 있던 아이 하나, 이렇게 두 마리의 고양이를 데려왔다. 반려동물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나도, 가족들도 이제는 고양이와 함께하는 생활이 마냥 행복하다. 처음엔 고양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안내서, 지침서 등을 몇 권 사서 읽었다. 그중 일본 저자가 쓴 책을 보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하자.” 고양이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무작정 수를 늘리지 말고 내가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나온 한 문장이었다. 재난 시 머리에 보호 모자를 쓴 고양이 주인이, 양

팔에 하나씩 고양이 이동장을 끼고 킁킁거리며 피난하는 모습의 삽화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고층 아파트에 사니까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도망쳐야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 고양이를 어떻게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고양이는 개와 달라서 목줄을 한단다가 끈으로 통제할 수 없다. 영역동물이라 집 밖에 나서면 겁을 먹고 당황해서 숨거나 도망쳐버린다. 실제로 화재라든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인인 내가 안고 도망치려 하거나 억지로 데리고 나가려 한다면, 십중팔구 우리 고양이들은 선반 안으로 숨어버리거나 흥분해서 경중경중 도망쳐버릴 것이다. 내가 구출할 수도 없고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올 게 뻔하다. ‘반려동물을 기르겠다면 위급한 순간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져야 하는 거구나.’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그제야 떠올랐다.

지진이라는 재난과,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핵발전소 사고. 이 두 가지 비극의 조합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6년 9월 국내 첫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경주에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등 14개의 핵발전소가 몰려 있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예정인 울산에도 작년 5.4 규모의 포항 지진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발전소와 방폐장도 우려스러운데, 당장 살 곳을 잃은 이재민들도 큰 문제다. 수많은 건물의 외벽에 금이 가고 필로티 기둥이 부서지고 건물 자체가 기운 곳도 있다고 한다. 건물 피해 복구와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터라 포항 지진의 이재민들은 아직 공설운동장을 임시대피소 삼아 지내야 한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아침만 해도, 포항, 경주 지진 발생 재난알림 휴대폰 소리에 새벽잠에서 깬다.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공식은 애저녁에 깨졌고 두려움과 불안이 그림자처럼 전 국민의 뒤통수를 따라다닌다.

그런 의미에서 남다르게 다가오는 그림책 한 권이 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경계 구역 안에 남겨진 소와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희망의 목장』(森繪都 저, 吉田尙尙 그림, 『希望の牧場』, 岩崎書店, 2014)이 그 책이다. ‘희망의 목장 후쿠시마’를 이끄는 요시자와 마사미(吉澤正巳) 씨가 그림책의 주인공이다. 소치기인 주인공은 목장에 살면서 그야말로 소를 돌보고 먹이는 일을 한다. 복잡할 것 없던 그 일이 복잡해지게 된 이유는, “목장 가까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때문”이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지 한 시간쯤 뒤에

쓰나미가 원자력발전소를 덮쳤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방사능이 퍼져 나갔어요. 모두가 도망쳤죠.

마을이 텅 비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요.

사람들은 도망쳤지만 소, 돼지, 닭, 개, 고양이들은 남겨졌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주인공 ‘나’의 목장에는 소 330마리가 있었는데 “방사능을 뒤집어 쓴”(피폭된) 소들은 먹을 수도, 팔 수도 없으므로 한 푼의 가치도 없어졌다. 그래도 소들은 살아 있으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물을 달라, 밥을 달라 아우성을 친다. 모두가 떠나고 없는 오염된 마을이 무섭지만 ‘나’는 소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

“4월. 원자력발전소에서 반경 20킬로미터 안은 ‘출입 금지 구역’이 됐”고 목장도 그 안에 들어 있었다. 공무원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이제는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어쩔 수 없다. “소들에게 밥을 줘야 하니까. 나는 소치기니까.”

“5월. 이번에는 20킬로미터 안에 있는 소들을 ‘살처분’하라고 했다.” “소를 죽이세요.” 공무원이 또 찾아와 말했지만 ‘나’는 싫다고 한다. ‘팔지도 못할 소, 돈이 안 되는 소를 돌보는 일, 이진 쓸데없는 일일까? 어리석은 일인가?’ 주인공은 되된다. 혼자 묻고 혼자 답한다.(불과하게 불이 붙어진, 침통

한 표정의 주인공이 맥주잔을 앞에 두고 혼자 식탁에 앉아 있는, 이 장면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나는 소치기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소치기이고, 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소치기의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눈을 뜨는 아침마다 소들에게 밥을 주고 소의 똥을 치운다.

내다 팔기 위해 소를 길렀지만, 그리고 이제 그 값어치를 잃었지만, 이들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닌 생명이다. 그것을 알기에 소치기는 소가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더구나 인간이 싸지른 똥, 핵발전소라는 원죄를 무고한 생명들에게 덮어씌우고 자기만 살자고 도망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만 아니라면, 지금 이 목장은 사람들이 모두 떠난 채 동물과 자연만 남은 평화로운 곳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목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곳은 ‘희망의 목장’이라고 불린다. 일본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사료와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 대형 버스를 타고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인간의 죄를 인간으로서 갚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이들이 희망이 아니고 무엇일까.

지구온난화, 핵발전소, 미세먼지, 여러 종류의 자연재해와 또 슬한 인재들. 그 커다란 절망 앞에서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한다. 그리고 소치기처럼 아주 작은 일이라도 희망을 믿고 바라며 꾸준히 행해야 한다. 매일매일 깨끗하게.

p.s.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희망의 목장 후쿠시마’를 검색하면 요시자와 마사미 씨의 인터뷰 등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다.

p.s. 출입 금지 구역이 된 후쿠시마, 인간이 버리고 간 동물들의 뒷모습을 담은 책으로는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후쿠시마의 고양이』 등이 있다. 사진 위주로 된 책이라 핵발전소나 폐기장 등의 위험에 대해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에도 좋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페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저작 『체르노빌의 목소리』도 체르노빌 사고 생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 어떤 책보다 생생하게 핵의 위험을 깨닫게 한다. 작가가 실제로 체르노빌을 방문하여 아직도 그곳을 지키며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기록한, 엠마뉘엘 르파주의 그래픽노블 『체르노빌의 봄』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p.s. 고양이 지침서를 읽자마자 고양이 이동장 2개를 마련했다. 그리고 유사시에 바로 꺼낼 수 있도록 현관 옆 창고 선반에 얹어두고 가족들에게도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위급한 일이 생겨도 고양이들과 함께 탈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

# 아니, 세상에 이런 과학자가 있다고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정모 지음

바들비, 2018

##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



지행합일. 생각과 행동이 맞춘 사람은 되기도 어렵거니와 보기도 힘들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곤하다. 불행하게도 내 주변에는 생각과 행동이 비교적 비슷한 사람이 몇몇 있다. 이 자리에서 소개할 책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의 저자 이정모가 그렇다.

지금은 과학자 혹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상당히 걱정되는 ‘선배’였다. 독일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과학자로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다. 속이 꽉 찬, 대중을 위한 과학 책을 펴내긴 했는데, 운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정재승(『과학 콘서트』)이나 이은희(『하리하리의 생물학 카페』)처럼 TV 등의 매체에 소개되지도 않았다.

박사학위가 없으니 대학에 자리를 잡기도 어려워 보였다. (그래도 능력이 출중한 탓에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몇 년간

‘교수’ 소리를 들긴 했다)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 해도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저술가의 삶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당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는 이런 걱정도 했다. ‘아, 두 딸이 나이도 어린데….’

사정이 그런데 오지랴도 넓었다. 돈, 돈, 돈 해도 모자랄 판에 가끔씩 만나면 대안학교 같은 곳에 가서 과학 강의했던 일을 들려주곤 했다. “대안학교에 가니까 말이야. 과학과 사회의 관계 같은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학 지식을 경시하는 거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선배가 대안학교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 않아?’

그는 또 말 그대로 생활 정치인이었다. 고인이 된 한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라는 건 알았는데, 선거철이 되니까 말 그대로 정치꾼으로 돌변했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서더니,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전국 최초로 살던 곳에서 야당의 선거 연합(고양 무지개 연대)을 일궜다. 그때도 속으로 생각했다. ‘아, 저 오지랴!’

그러던 참에 깜짝 소식이 들렸다. 2011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자연사 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시끌벅적한 곳으로 만들어놓더니, 지금은 2017년 5월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개관한 서울시립과학관 초대 관장으로 왈자지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아, 이 이야기도 해야겠다. 이렇게 좌충우돌 살아가는 와중에 동네에서 만난 마음 맞는 이들과 의기투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배우고 “춘천까지 가서 시험을 봐 ‘유기농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마련하겠다고” 생태농업을 실험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태양을 피하는 방법」에 나와 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이런 문제적 인간 혹은 과학자가 쓴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을 한번 훑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모른다. ‘아, 이 과학자 참 생협에 맞춤형 사람일세.’

그렇다. 이정모야말로 ‘어울러’ 살고 또 ‘함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과문하지만, 생활협동조합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이 책은 부제처럼 비교적 가벼운 과학 ‘에세이’다. 굳이 ‘에세이’를 강조한 이유가 있다. 한 편, 한 편이 교과서에 실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에세이다. 가끔 우리나라에도 빌 브라이슨<sup>Bill Bryson</sup>처럼 유머러스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작가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바로 내 옆에 있었다. 깨알 같은 과학 지식을 사는 얘기에 버무려서 전하는 솜씨가 일품이다.

사실 이 책에 실린 에세이의 상당수는 ‘정치’ 칼럼이기도 하다. 책에 묶인 대부분의 글 초고가 박근혜 정부에, 또 2017년 겨울을 촛불이 밝히던 시점에 쓰였다.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저자의 가감 없는 견해가 그대로 드러난다. 적어도 나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한 번 쾌감을 느꼈다.

그렇다고, ‘과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깨알 같은 과학 지식”이라고 언급했는데, 사실 과학 지식은 그냥 양념이다. 이 책은 일상을 말하고 정치를 말하면서 ‘과학 하는 태도’를 언급한다. 이 책에 실린 과학 지식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30초면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방법이다.

칼 세이건은 “과학은 단순히 지식의 집합이 아니다. 과학은 생각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존경하는 물리학자 김상욱은 “과학은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같은 말이다.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나도 과학은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과학적이면 좋겠다. (8~9쪽)

물론, 이 책에 실린 이정모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생협평론』 독자들이 제일 불편해할 만한

글 「청부 과학자」에 실린 견해가 그렇다. 그는 110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그린피스에 GMO를 옹호하는 공개서한(2016년 6월)을 보낸 사실을 언급한다.

당시 110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주장했듯이 “GMO가 인간이나 동물에게 해롭다는 사실”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꼭 그런 과학적 증거 없이도 GMO를 거부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MSG가 몸에 좋지 않다는 증거가 없다고 MSG 맛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에게 MSG를 먹으라고 권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GMO 표시제를 옹호한다.

더구나 GMO는 과학 외에도 환경,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다. 생태계 교란, 세계의 불공평한 먹을거리 분배, 종자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농과 몬산토Monsanto 같은 초국적 기업의 갈등, 과학기술과 자본의 유착 등... 어쭙잖게 덧붙이면, 과학자가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어떤 과학은 그 방향 자체를 돈벌이 여부가 결정한다.

나는 110명의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이런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해서 서명을 한 이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 사실 그런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정모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듯이 노벨상 수상자라고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부지기수다.

그래서 조금 의아했다. 내가 보기엔 어느 노벨상 수상자보다 천 배, 만 배는 훌륭한 그가 최소한 이 글에서는 균형을 살짝 잃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이 글마저도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 이 글의 마지막 문장에 나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과학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제 글을 마무리해야겠다.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은 근래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유쾌하다. 평소 과학이라면 웬지 거부감부터 이는 평범한 생활인이라면 이 책으로 위밍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확신컨대, 이 책을 읽고 나면 인간 이정모와 이웃이 되고 싶으리라.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런 좋은 인간이 지근거리에 있는 건 피곤하다.

이유는? 직접 친구가 되어보시라! 참, 내가 오지랖 넓게 걱정하던 두 딸은 이미 훌쩍 커서 아빠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바로 그런 신세가 되었다. 세상은 돌고 돈다.

## 협동조합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는 자연재해

### 이주희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 일본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재해 지역 복구 지원

●●● 2016년 쿠마모토 지진과 2017년 규슈 호우로 인해 일본 쿠마모토와 후쿠오카현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후쿠오카의 생협 에프코프에서는 피난소나 긴급가설 주택에서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미야기생협과 미야기현의 (주)아마가타야(山形屋) 상점 등에서 제공받은 지원물자를 사용하여 도호쿠 지방(일본의 혼슈本州 북동부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의 6개 현)의 향토 요리 핫토지루(はっと汁: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편 것을 국물에 넣어 먹는 요리)를 지금까지 재해민들에게 21회, 총 4,048식을 제공해왔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3일 '핫토' 요리의 산지인 미야기 도메시에서 개최된 '제14회 일본 핫토 페스티벌'에 코프규슈사업연합, 생협쿠마모토, 미야기생협, 에프코프와 (주)도호쿠협동사업개발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산물로 만든 상품을 선보였다.

도호쿠협동사업개발은 지난 2015년 4월 미야기생협, 코프도호쿠산네트사업연합(이와테생협, 생협교리츠샤, 미야기생협 3개의 도호쿠 지역 생협이 만든 사업연대)이 설립한 회사이다. 설

립의 배경에는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는 생협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진 복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생산지의 판로 확대, 생협의 사회적 신뢰도 상승을 목표로 다양한 상품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호쿠협동사업개발에서는 도호쿠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상품 개발은 물론 전국적인 홍보 등을 위해 새로운 브랜드인 ‘코콘토 호쿠古今東北’ 시리즈를 개발했다. 이 브랜드는 도호쿠 지역의 지진재해 복구와 지역 복구 응원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겨져 있다. 한편, 시대를 뛰어넘는 맛을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의 식재료나 전통적인 식문화를 재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품 제공을 함께 추구한다. 현재는 같은 도호쿠 지역의 아오모리현민생협과 코프아오모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비롯하여, 각 생협의 매장에서 야채, 주류, 육류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판매 중에 있다. 이러한 사업 개발은 미야기생협이 주도하는 ‘미야기현 먹거리 부흥 네트워크’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2011년 7월부터 지진 발생 후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의 농수산물 생산자나 가공업자 등 총 18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생산 기반의 회복, 새로운 특산물 마련, 새로운 고용 창출, 홍보 활동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조 : 『CO-OP navi』 2018년 2월 791호  
<http://cocon-tohoku.com/> 古今東北 홈페이지  
<http://www.miyagi.coop> 미야기생협 홈페이지

## 미국 전기협동조합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복구하다

●●● 허리케인 하비Harvey가 지난해 텍사스Texas 중부를 강타했을 때 샌 마르코스San Marcos 강물 수위가 25피트(약 7.5미터) 상승했다. 허리케인으

로 입은 전기 피해를 복원하는데 보통 최소 10여 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주변에 사는 블루보넷전기협동조합Bluebonnet Electric Cooperative의 조합원들 덕분에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지역의 상황까지 드론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잭슨전기협동조합Jackson Electric Cooperative에서는 드론팀이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전기가 끊겨 깜깜한 서비스 지역에 드론을 이용해 약 1,600개가 넘는 전신주를 확인하는 등 총 60번의 검사를 진행했다. 텍사스 에드나Edna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잭슨전기협동조합에 따르면, 드론 사용으로 복구 기간이 짧아졌으며, 드론의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까지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무인비행항공기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예정이다.

전기협동조합 중 처음으로 드론을 사용한 블루보넷협동조합은 홍수로 불어난 물을 사람이 직접 건너가서 확인하거나,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드론으로 로프를 연결하여 강 건너편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드론은 헬기나 항공기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Irma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다른 협동조합에서도 드론을 사용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업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추진했다.

미국전기협동조합연합회NRECA는 또한 지난해 허리케인 마리아Maria가 강타한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작업에도 힘을 보탰다. 각각 7명에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7개의 긴급상황관리팀IMTs이 푸에르토리코 내 7곳의 주요 지역에 배치되어 푸에르토리코전력당국PREPA, 미국공병단USACE과 함께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미국전기협동조합연합회, 미국전력협회APPA와 에디슨전기연구소EEI,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전력당국, 전력회사가 MOU를 체결하여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초기 배치는 투자자 소유의 전기회사 및 공공 전력회사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2차 배치에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합류한다. 미국전기협동조합연합회는 “미국의 전기협동조합은 농

촌, 산악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전력을 복구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 미국 신용조합들 또한 복구 지원에 합류하고 있는데, 미국 신탁공제회<sup>CUNA Mutual</sup>는 재난대응팀을 배치하고 비상용품을 보내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신용조합 직원들을 지원하고 서비스 복원을 도왔다.

현재 미국전기협동조합연합회에는 900여 개의 전기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은 총 47개 주 4,2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 [www.electric.coop](http://www.electric.coop) NRECA 미국전기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thenews.coop> Cooperative News 홈페이지

연초에 다짐했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파릇파릇 움트는 새싹들을 바라보며 어느덧 흐지부지 내려놓은 계획들을 다시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는 시기, 그래서 3월은 다시 한 번 '시작'을 외쳐보는 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 쌓이기 마련입니다. 물건이 쌓이고 그에 얽힌 추억이 쌓이고 생활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는 흔히 정리를 합니다. 변화를 기대하며 새로운 물건과 옛 물건들, 또는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뒤엉켜 있는 집 안 정리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자리를 마련하는 일종의 의식이라고나 할까요? 이번 기회에 툭툭, 쌓여 있는 복잡함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다시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덜어내고 비워내는 정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몸을 움직여 정리하는 시간 속에 어지러웠던 마음, 회피했던 고민들도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까요?

## 새로운 시작을 함께 준비할 사회적경제!

###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집 안의 묵은 먼지부터 털어내고 몸과 마음을 환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뿔싸! 막상 옷장과 화장대, 책장을 죄다 열어놓고 보니 어디서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이럴 때 어디서 '마법의 손'이라도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은 집 정리를 돕는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가정 공간의 변화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2013년

설립되어 정리수납 컨설턴트 양성, 전문 컨설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사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리=버리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내 곁에 공기처럼 머물던 ‘내 것’들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은 정리수납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정리수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태를 파악한 뒤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정리정돈이 끝나면 정리 유지 교육과 기초 정리수납 교육도 실시한다고 하니 든든합니다. 2016년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물론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 공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사업에도 선정되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협동조합이라 더 믿을 수 있지요.

집 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리. 작은 부분이지만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을 살펴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http://occoop.or.kr>)을 참고하세요.

## (주)인스케어코어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름, 2016년 하반기부터 자연드림몰에 입점한 홈클리닝 전문업체인 사회적기업 인스케어코어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사 청소, 거주 청소, 세탁기와 에어컨 청소는 물론 살균, 진드기케어, 창틀 청소 등 쉽게 청소하기 어려운 곳을 포함해 집 안 대부분을 맡아 청소하는 인스케어코어는 2010년 설립되었습니다. (원래는 2006년 ‘웅진’

의 홈클리닝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09년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에서 인수했지만 2010년 법인이 분리되어 현재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사회적경제 영역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죠.

인스케어코어는 체계화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별점 외에도 직원 모두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코ECO, Ecology Consultant'라는 명칭이 붙은 직원들은 바로 청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받은 뒤에야 위생환경관리사로 현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노동이 아닌, 직업의식을 갖춘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내부 프로그램 통해 마련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은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집 안 곳곳의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어수선한 물건들을 치우는 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청소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의욕과 에너지로 다시 채워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안정감과 에너지를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져간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올봄, 집 안 곳곳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상쾌한 바깥 공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디 이번 봄만큼은 미세먼지에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인스케어코어 홈페이지(<http://www.inscare.or.kr>)를 참고하세요.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창간 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 창간 특집 좌담 ]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생협평론 2011 봄(2호)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과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 허현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 좌담 ]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 정찬율(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좌담 ]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터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 장원봉(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 오항식(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 좌담 ]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 박제선(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과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좌담 ]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 좌담 ]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 [ 특별기고 ]

####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로저 리차드슨(R. C. Richardson,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 [ 좌담 ]

####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억, 조성돈, 김아영

## 생협평론 2012 가을(8호)

### 특집

####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의 만남

—신효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로생협 이사장)

#####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 [ 좌담 ]

####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 정원각(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맹신협

—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 좌담 ]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 기노채, 김대훈, 민영, 조향숙, 김아영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 오항식(아이쿱생협 쿠퍼티스 경영이사)

[ 좌담 ]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특집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 좌담 ]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특집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 좌담 ]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원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자, 이향숙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 발제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 토론 ]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원 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원 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훑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 좌담 ]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 김성기(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 김영식(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 좌담 ]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 권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 좌담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 좌담 ]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특집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 윤주일(쿠파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 강민수(롭비즈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 좌담 ]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재

—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 생협평론 2015 봄(18호)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 좌담 ]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원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룡(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 좌담 ]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희,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마을과 경제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레자언드림파크 사례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원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 좌담 ]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특집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좌담 ]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 박란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특집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 박성재(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 좌담 ]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 장민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선, 유재흠

특집

협동조합과 혁신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김활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 좌담 ]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김대훈, 김아영, 김홍길, 서종식, 정경섭

특집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 · 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천(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 좌담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김현, 박승룡, 이우용, 박찬선, 강민수

특집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 좌담 ]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김미선, 김종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특집

불안의 시대,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길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는 가능한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의 고용 실태와 과제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미'있는 일하기,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가요?

—제현주(협동조합 롤링디스크 조합원)

[ 좌담 ]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김선경, 마성균, 백희원, 서종식, 최혁진

생협평론 2017 여름(27호)

특집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 <스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 좌담 ]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생협평론 2017 가을(28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탐구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상생 : 캐나다 퀘벡의 사례

—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

—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따로 또 같이

— 박경숙(순천광장신문 시민기자), 이종관(순천광장신문 편집장)

평화시장의 모범업체

—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 좌담 ]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

## 생협평론 2017 겨울(29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 김종걸(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 곽형모(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투명하나 충분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 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 이순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자치국장)

[ 좌담 ]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 단행본

No.	발행년도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 일본 21세기코프연구센터 저   한국생협연합회 역
2	2008	『iCOOP생협 10년사 : 협동, 생활의 윤리』 ___ iCOOP생협연대 저
3	2008	『일본 위커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___ 김주숙, 김미영, 김양희, 안세희, 정금수, 이향숙
4	2008	『생활 속의 협동』 ___ 오사와 마리 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___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6	2009	『새로운 생협운동』 ___ 한국생협연대 엮음 (초판 : 2002)
7	2011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___ 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김형미·김영미 옮김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 김형미 외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___ 에드가 파넬 저   염찬희 옮김
10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 ___ 일본생협연합회 엮음   이은선 옮김
11	2012	『일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___ 오리토이사와와카니시 케이코 저   이은선 옮김
12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___ 사이토 요시아키 저   다나카 히로시 옮김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___ 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이은선 옮김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___ 니시무라 이치로 저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15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___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정광민 옮김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___ 서울특별시

-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_\_\_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_\_\_김창진 편저
-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2 2015 『사람을 탐하다 : 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_\_\_인물탐구동아리 '사탐' 저
-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_\_\_아너스 오르네 저 | 이수경 옮김
-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  
 \_\_\_A.F. 레이들로 저 | 염찬희 옮김
- 25 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_\_\_G. D. H. 코울 저 | 정광민 옮김
-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7 2016 『아이쿱 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_\_\_차형석 지음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8 2017 『로버트 오언 : 산업혁명기,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혁신가』  
 \_\_\_G. D. H. 콜 저 | 홍기빈 옮김
- 29 2017 『기업 소유권의 진화』  
 \_\_\_헨리 한스만 저 | 박주희 옮김

### 연구보고서(일반)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7	연구보고 2007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___김주숙·김성오·정원각
2	2009	연구보고 2009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___김아영·정원각·이향숙
3	2010	연구보고 201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___염찬희·엄은희·이선옥

- 4 2010 연구보고 20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_\_\_장원봉·하승우·임동현
- 5 2010 연구보고 2010-3 『생협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_\_\_김찬호
- 6 2010 연구보고 2010-4 『2009 iCOOP생협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염찬희
- 7 2011 연구보고 2011-1 『아이쿱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_\_\_정해진
- 8 2011 연구보고 2011-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_\_\_장종익·김아영
- 9 2011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웨덴생협—의 동향』  
 \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 10 2011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 11 2012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_\_\_장종익
- 12 2013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_\_\_장상환
- 13 20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 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염찬희·손범규·지민진
- 14 2013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이향숙·지민진
- 15 2013 생활과 동향 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지민진
- 16 2014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_\_\_손범규
- 17 2014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미』  
 \_\_\_지민진

- 18 2014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_\_\_\_손범규
- 19 2014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0 2014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 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_\_\_\_서진선
- 21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_\_\_\_염은희
- 22 2014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이문희
- 23 2015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_\_\_\_서진선
- 24 2015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_\_\_\_지민진·서진선
- 25 201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_\_\_\_정은미
- 26 2015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7 2015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_\_\_\_지민진
- 28 2015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이예나
- 29 2015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이향숙
- 30 2016 흐름을 읽다 1-01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_\_\_\_지민진
- 31 2016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_\_\_\_지민진
- 32 2016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_\_\_\_장재봉
- 33 2016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_\_\_\_윤길순·최은주·서진선

34	2016	흐름을 읽다 1-02	『소비, 근심을 덜다 : 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___지민진
35	2017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___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36	2017	흐름을 읽다 2-01	『소비, 그리고 쉼(休)』 ___지민진
37	2017	흐름을 읽다 2-02	『생활동향연구, 2017. 6』 ___지민진
38	2017	흐름을 읽다 2-03	『생활동향연구, 2017. 7』 ___지민진
39	2017	흐름을 읽다 2-04	『생활동향연구, 2017. 8』 ___지민진
40	2017	흐름을 읽다 2-05	『생활동향연구, 2017. 9·10』 ___지민진
40	2017	흐름을 읽다 2-06	『생활동향연구, 2017. 11·12』 ___지민진
40	2017	기획연구과제 2017-2	『GMO 없는 사료 도입에 관한 일고찰 : 생협 사례를 중심으로』 ___이향숙
40	2017	흐름을 읽다 2-07	『경기와 일상의 괴리 : ‘나’를 찾는 소비』 ___지민진

### 연구보고서(수행연구)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연구자
1	2014	연구원 리포트	『훗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___이향숙
2	2014	서울시 기획 연구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___지민진·최은주
3	2015	기획연구과제 2015-6	『고양과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 한 조사』 ___손범규·신효진
4	2016	양천구 기획 연구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___이향숙·김경아

연구보고서(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No.	발행년도	시리즈 번호	제목/ 편역자
1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이경수
2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이경수
3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___이경수
4	2013	10-1	『푸드 테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이경수
5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이경수
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이경수
7	2014	2014-13	『이론』 『사례』 『거버넌스』 ___이경수
8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이경수
9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이경수
10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이경수
11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이경수
12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이경수
13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이경수
14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 추진 정책』 ___히로타 야스유키 지음, 이향숙 번역
15	2017	2017-03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 2016 아이쿱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___이경수
16	2017	2017-09	『사람 중심의 일터 : 사회 혁신 생태계 몬드라곤 사례연구 :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5』 ___윤길순
17	2017	2018-01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모음집』 ___윤길순

# 생협평론 정기구독 안내

『생협평론』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공론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신청 방법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http://www.icoop.re.kr)) 홈페이지에 있는  
‘1년 구독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남겨주세요.

## 구독료

- 1년 구독료 : 10,000원

## 입금 안내

- 계좌 : 국민은행 448601-01-449694
- 예금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기타

- 구독 기간에 책값이 올라도 정기구독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분실이나 반송 등 배달 사고로  
『생협평론』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연락 주세요.
- 낱권 구매는 연구소 이메일로 개별 신청 바랍니다.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mailto:icoop-institute@hanmail.net)